

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2020. August
Vol. 44

8



재정 INSIGHT

KPFIS 인사이트
재정칼럼
툰아보기

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키워드 재정
해외재정동향

재정 STORY

이달의 재정 이야기
재정 Talk Talk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재정 캘린더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August. 2020
VOL. 44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273-05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본부 | 02-6908-8593
제작 경성문화사 | 02-786-2999

재정 INSIGHT

04 · KPFIS 인사이드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재정정책의 효과성 분석
김명규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요약
정성호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위원
- 검증기관 공인회계사가 바라본 e나라도움의 효과, 오해, 바람
허웅 이정지유희계법인 이사(공인회계사)·행정학박사
- 재정 데이터 담은 한국재정정보원의 고유 업무
정성호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위원

34 · 재정칼럼

- 디지털 뉴딜과 빈곤한 상상력의 극복
고길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행정 빅데이터로 디지털 뉴딜을 열자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42 · 톺아보기

- 한국판 뉴딜 중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10대 대표 과제



재정 NOW

- 44**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 50** •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 56** • 키워드 재정
부동산
- 60** • 해외재정동향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IMF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Update,
June 2020」



재정 STORY

- 66** • 이달의 재정 이야기
 - 청년 일자리를 이끌어가는
방송미디어 전문인력 양성 교육
 - 창작 전 주기를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활성화 사업
- 72** • 재정 Talk Talk
민간투자사업이 무엇인가요?
- 74** •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인간자본으로서의 '아름다움'
- 78** • 경제철학 이야기
아마르티아 센의 경제사상:
빈곤의 경제학의 선구자
- 82** • KPFIS의 서재
- 84** • 재정 캘린더
- 86**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01
KPFIS-인사이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재정정책의 효과성 분석 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에 각국 정부는 대규모 재정책대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3차례에 걸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대응했다. 사실 현재의 국면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에서 연구기관에 이르기까지 이견이 없다. 단 그 규모와 효과를 두고서는 다양한 연구와 견해가 부딪치곤 한다. 그래서 이번호에서는 dBrain의 최신통계를 활용해 거시적 관점에서 재정지출의 견인 효과와 구축 효과를 검토하고, 상·하반기 경기조정(Cyclical Smoothing) 관점에서 재정조기 집행 효과를 분석해보았다. 본 분석은 dBrain의 최신 자료를 활용한 점과 출연금 및 국고보조금의 상세 자료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1 _____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

전 세계는 올해 1월¹ 이후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충격이 지속되고 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00만명(2020.8.11. 기준)이나 되고, 지금도 빠르게 늘고 있다. OECD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판단하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두 개의 시나리오²(Single Hit vs Double Hit)로 발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추가적 경제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OECD 평균은 -7.5~-9.3%, 유로지역은 -9.1~-11.5%로 예측됐다. 우리나라는 신속한 방역으로 감염병 영향을 최소화한데다,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대응 덕분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타격이 적은 편에 속한다. 2차 확산이 없는 경우 경제성장률이 -1.2%, 2차 확산 시 -2.5%로 예측됐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상사국으로 판단하고, 3월부터 7월까지 3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3차에 걸친 추경은 2020년 본예산 대비 약 34.6조원의 세출확대와 11.1조원 세입경정 예산을 담았다. 정부는 방역 중심의 긴급 사업지원 성격의 1차 추경 이후, 2차 추경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계 및 소득보장을 위해 정책대응 패키지를 지원하였고, 3차 추경에서 경기대응을 위한 세제감면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자금(금융) 지원을 비롯한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종합 패키지를 추진하였다.

표 1.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재정 총량 변화

(단위: 조원, %)

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B-A)
		본예산 (A)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B)	
◇ 총 수입	476.1	481.8	481.6	482.2	470.7	-11.1
◇ 총 지출	469.6	512.3	523.1	531.1	546.9	+34.6
◇ 통합재정수지	6.5	-30.5	-41.5	-48.9	-76.2	-45.7
◇ 관리재정수지	-37.6	-71.5	-82.0	-89.4	-111.5	-40.0
◇ 국가채무 (GDP 대비, %)	740.8 (37.1)	805.2 (39.8)	815.5 (41.2)	819.0 (41.4)	839.4 (43.5)	34.2 (3.7%p)

자료: 기획재정부

¹ 우리나라는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보고되었다.

² Single Hit 시나리오는 현재의 방역 조치로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하는 경우이고, Double Hit 시나리오는 10~11월경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조치를 재개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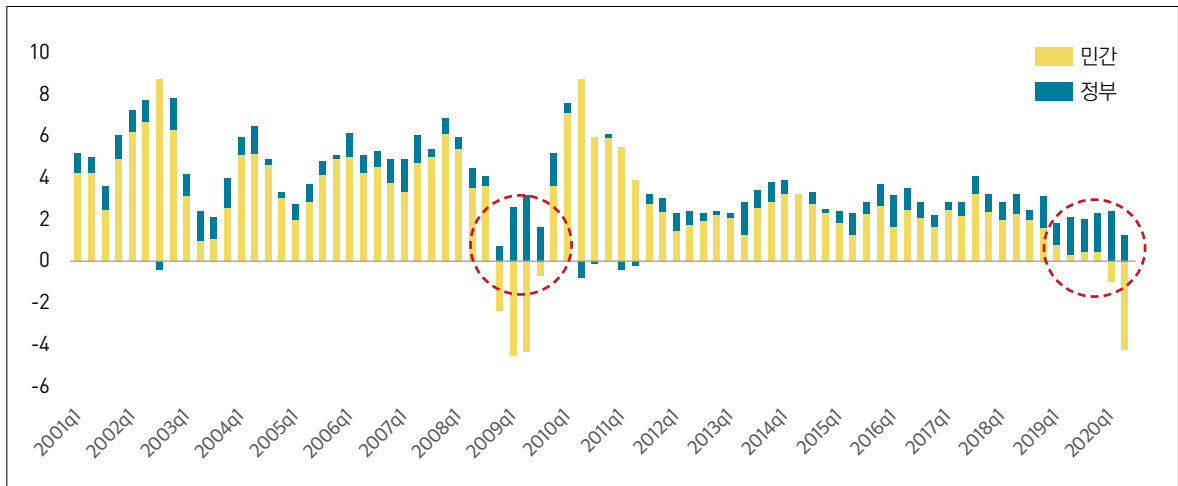
이는 OECD(2020)와 IMF(2020)에서 전망한 바와 같이 역성장이 자명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대안이다. 정부지출 확대 정책은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같은 정책 대상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가계소비 지원으로 경색된 소비시장을 완화하는 등 거시경제 흐름을 개선³하는 것이 목표이다.

2 재정부지출의 효과성 분석: 구축 효과 vs 견인 효과

경제는 평소 민간을 중심으로 성장을 견인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급격한 경기침체를 완화한다. 2000년 이후 분기별 GDP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과 정부가 경제성장률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최근 2019년 2분기 이후에 정부의 기여도가 크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3차 추경을 편성하여 하반기까지 재정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 기여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 경제성장률의 민간, 정부 기여도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접속일: 2020.7.24.)

재정부지출의 확대는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킬 유인을 줄이는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재정부지출을 증가시킬까? 정부는 재정을 통해 민간의 소비와 투자 증가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는 견인 효과(Crowding-In Effect)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재정정책은 유효수요의 증가를 통해 국민소

득 수준의 향상을 도모한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한 대응도 맥락을 같이 한다.

재정지출의 효과성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정책의 구축 효과보다는 견인 효과가 일반적이다. 견인 효과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연구로

Aschauer(1989)는 공공투자에 의해서 공공

자본의 축적이 높아질 경우 민간자본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민간자본 투자가 증가할 유인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Şen and Kaya(2014)는 기존 연구들이 분석방법론⁴과 국가마다 다른 경제구조로, 일관된 구축 효과나 견인 효과의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정사업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출을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출을 소비와 투자로 구분하여 정부지출이 민간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견인 효과와 구축 효과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견인 효과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민간의 소비 또는 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하여 추가적인 소비 또는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를 의미하고, 반대개념인 구축 효과는 재정지출의 증가가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오히려 위축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정책의 구축 효과와 견인 효과를 중심으로 한 효과성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Y_{k,t} = \alpha_k + \beta_k G_{k,t} + \gamma X_t + \varepsilon_{k,t}^5$$

³ 통화량은 M2 기준으로 2월 말 2,977조원에서 5월 말 3,066조원으로 3.0% 증가하였다.

⁴ 주요 분석방법으로는 OLS(Ordinary Least Square), Granger Causality Test, 공분산 분석, VAR(Vector Autoregression), Panel Data 분석,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DSGE(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 등을 활용하고 있다.

⁵ k 는 지출 항목으로 투자와 소비로 구분하였으며, $Y_{k,t}$ 는 민간투자과 민간소비이다. G_k 는 정부투자과 정부소비다. 다시 말하면, 정부 투자가 민간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정부소비가 민간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과 같다. 실증분석 결과는 추정계수 β 가 양(+)의 부호인 경우 견인 효과가 있으며, 음(-)의 부호인 경우는 구축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X_t 는 민간투자과 민간소비를 결정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는 변수로 구성된다. 또한, 분기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계절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분기 더미 변수를 반영하였다. 분석 기간은 2007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다.



분석 결과, 실질 정부투자가 실질 민간투자를 견인하는 효과가 나타나, 정부투자는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투자가 민간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추정계수(β)가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민간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투자함으로써 후속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투자 측면에서는 견인 효과가 있는 반면, 소비 측면에서는 견인 효과나 구축 효과가 불분명하였다. 우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모형별로 추정계수(β)의 부호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직관적으로는 각종 정부의 이전지출이 가구 소득으로 이어져 민간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설명 변수를 보조금 및 경상 이전, 재화 및 용역 자료로도 분석하였으나 동일하게 유의미한 분석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⁶.

표 2. 민간투자 결정요인 분석 결과

구분	종속변수 Log(실질 민간투자) 2007년 1분기~2020년 2분기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Log(실질 정부투자)	0.344*	0.353**	0.498***	0.485***
실질 금리		-0.0959***	-0.0849***	-0.0903***
원/달러 환율			-0.000385	-0.000593*
Log(BSI)				-0.353*
상수항	12.59***	3.010	2.132	3.570
N	54	50	50	50
Adj. R-sq	0.187	0.437	0.450	0.503

주 1)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하였음. 원/달러 환율과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이하 BSI)는 분기 평균자료

2) 종속변수인 Log(실질 민간투자)는 단위근 검정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어 OLS로 분석하였음. 분기별 자료 사용에 따른 계절성 조정을 위해 분기 더미를 반영하여 통제하였으나, 추정 결과는 생략하였음

3) * p(0.1), ** p(0.05), *** p(0.01)

자료: 실질 정부투자, 실질 금리, 환율, BSI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실질 금리에 사용한 소비자물가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활용하였음

⁶ 단, 가구 소득보전 성격의 공적이전사업을 특정할 수 없었으나, 향후 관련 자료가 확보되면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3. 민간소비 결정요인 분석 결과

구분	종속변수 Log(실질 민간소비) 2007년 1분기~2020년 2분기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Log(실질 정부소비)	0.0595	-0.0164	-0.100	0.0713	0.150
Log(실질 민간소비) t-1	0.886***	0.647***	0.861***	0.581**	0.345
Log(실질 처분가능소득)		0.315**	0.243*	0.218	0.293*
Log(실질 가계부채 부담)			-0.0178	-0.0142	-0.0107
원/달러 환율				-0.0000639*	-0.0000722**
주택가격					0.270
상수항	1.120	0.864	0.00861	2.772	3.115
N	53	53	52	52	52
Adj. R-sq	0.975	0.979	0.979	0.982	0.982

주 1) 처분가능소득은 실질 GDP에서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하였음

실질 가계부채 부담은 가계부채에 분기 평균 금리와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였음. 주택가격은 주택매매지수(전체)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였음

2) 종속변수인 Log(실질 민간소비)는 단위근 검정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Lag 변수를 추가하여 단위근을 통제하여 분석하였으며, 분기별 자료 사용에 따른 계절성 조정을 위해 분기 더미를 반영하였으나, 추정 결과는 생략하였음

3) * p<0.1, ** p<0.05, *** p<0.01

자료: 처분가능소득에서 사용한 조세 항목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실질 정부소비, 실질 민간소비, 가계부채, 환율 자료는 한국은행, 소비자물가는 통계청, 주택가격지수는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활용하였음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정부의 재정지출은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있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정책목표 달성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정부는 경기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조기집행을 중심으로 재정집행 관리를 추진해오고 있다.

3 재정조기집행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재정조기집행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조기집행이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논지와 반대로 재정조기집행이 그다지 경기부양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논지가 공존하고 있다. 우선 재정의 조기집행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는 논지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내 경제성장률이 '상저하고(上底下高)'가 예상될 때, 연중 안정적인 경기상황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는 일종의 경기 평탄화 전략의 하나로 연중 고른 성장을 유도하는 조치이다. 둘째, 민간시장에 조기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고, 원활한 공급이 기업설비투자와 소비 등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예산의 상반기 집행률을 높



임으로써 연말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여 재정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효과적이다. 반면, 상반기에 재정을 대거 집행하였으나 하반기에 경기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가용 재원이 부족해져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김원식, 2007)는 시각도 있다.

이와 같이 재정의 조기집행의 효과성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는 불분명하므로 실증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재정조기집행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Y_t = \alpha + \beta ER_{k,t} + \gamma ER_{k,t} \times Upper_{k,t} + \delta X_t + \epsilon_t^7$$

2020년 조기집행 점검 대상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일반회계, 특별회계, 39개 기금)과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으로 연간계획은 총 305.5조원이다. 상반기 집행액은 상반기 계획인 189.6조원을 초과 집행한 203.3조원이다. 이는 연간계획 대비 66.5%를 집행한 것이며, 목표 집행률인 62.1%를 4.4%p 초과한 수준이다. 최근 조기 집행률은 연초 계획을 초과하여 달성하고 있으며, 2017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높아

⁷ Y_t 는 GDP 변수로 측정할 수 있다. $ER_{k,t}$ 은 k 지출 항목의 집행액으로 정의할 수 있다. 추정계수 β 는 k 지출 항목 집행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정도를 의미하며, 양(+)의 부호일 때 GDP 증가 효과로 유추할 수 있다. 음(-)의 부호이면 재정지출보다 여타 국민계정 항목에 대한 구축 효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조기집행의 효과를 별도로 분석하기 위해 집행액에 상반 기 더미 교차항을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추정계수 γ 의 부호가 양(+)의 부호이면, 상반기 경제성장에 유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⁸ 조기집행률은 2014년 58.1%, 2015년 60.0%, 2017년 59.0%, 2018년 62.1%, 2019년 65.4%, 2020년 66.5%이다.

지는 추세⁸다.

조기집행의 실증분석은 월별 총지출 자료를 활용하여, 재정집행 점검 대상 사업에서 실행 점검 대상 항목인 국고보조금, 출연금 사업과 기타사업을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국고보조금은 대상과 성격에 따라 민간 경상보조, 민간 자본보조, 지자체 경상보조, 지자체 자본보조 지출로 분류하였다. 단, 분석에 사용한 집행액은 중앙정부 지출액을 기준으로 집행(교부집행)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실행행과는 차이가 있다.

표 4. 조기집행의 실증분석 결과

구분	종속변수 Log(실질 GDP) 2007년 1분기~2020년 2분기							
	(1) 총지출	(2) 국고 보조금 + 출연금	(3) 민간 경상보조	(4) 민간 자본보조	(5) 지자체 경상보조	(6) 지자체 자본보조	(7) 출연금	(8) 기타
Log(집행액)	0.433***	0.272***	0.200***	-0.0756**	0.231***	0.0675	0.211***	0.472***
Log(집행액) × 상반기 더미	0.00116	0.00172	0.00365***	0.00814***	0.000982	0.00675***	0.00274*	0.00152*
상수항	5.764***	11.31***	13.92***	21.63***	12.84***	17.65***	13.39***	4.619***
N	54	54	54	54	54	54	54	54
Adj. R-sq	0.819	0.695	0.649	0.437	0.815	0.394	0.583	0.838

주 1) 분기별 자료 사용에 따른 계절성 조정을 위해 분기 더미를 반영하였으나, 추정 결과는 생략하였음

2) * p<0.1, ** p<0.05, *** p<0.01

자료: 실질 GDP는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이며, 이외의 모든 데이터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활용하였음

조기집행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첫째, 전 기간에 걸친 재정집행은 민간 자본보조를 제외하고는 실질 GDP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이 1% 증가할 때, 실질 GDP는 0.4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민간 경상보조, 민간 자본보조, 지자체 자본보조, 출연금, 기타 지출에서 상반기 재정집행이 증가할수록 실질 GDP를 소폭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상반기 경기하락을 완화하는 점에서 재정조기집행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상황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상반기 집행이 1% 증가하면, 상반기의 실질 GDP가 집행 항목에 따라 추가적으로 0.0015%에서 최대 0.008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경제성장 효과보다는 하방경직을 방지한다는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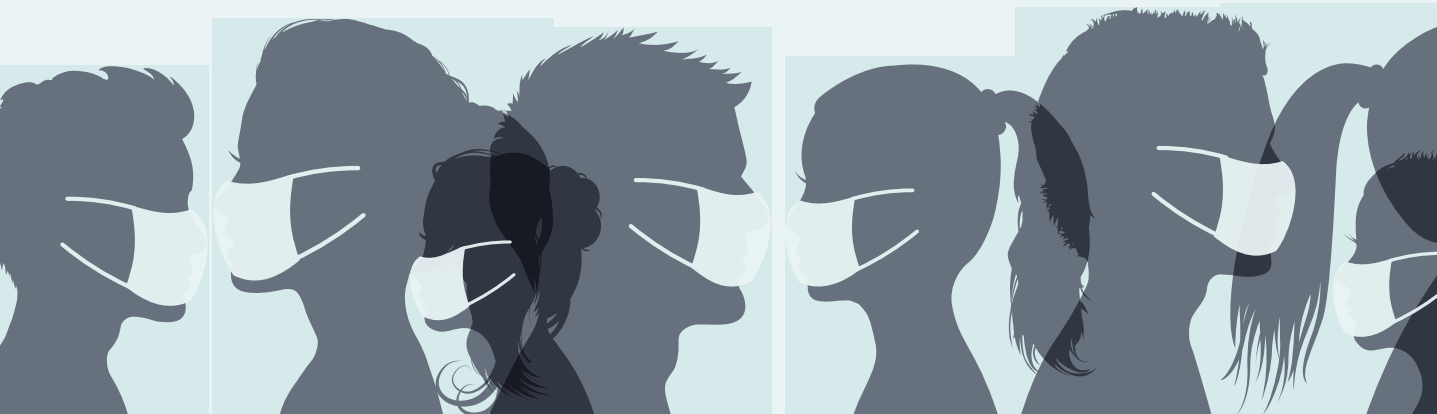
4 _____ 정책적 함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고, 재정지출이 민간부문의 투자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최근 3차에 걸친 추경 편성을 통한 대응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상반기 조기집행은 경기침체에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방어하는 제도로 현 상황에도 유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과성과 집행관리 관점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정부투자는 민간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 효과가 있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증거에 기반한 정책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지출 과정에서 견인 효과가 큰 분야에 투자하여 효율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고의 분석을 통해서는 정부투자의 방식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어려웠다. 향후 정부의 SOC 사업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투자 등 투자지출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민간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그 근거로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서는 향후 조세지출 정책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면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기업의 투자 촉진이나 가계의 소비 활성화 등을 유인하는 재정정책 수단이다. 2020년 기준 조세지출은 51.9조원의 규모가 예상되었고, 추경 과정에서 11.1조원이 추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의 효과성 분석 범위를 재정지출과 함께 조세지출의 효과성까지 확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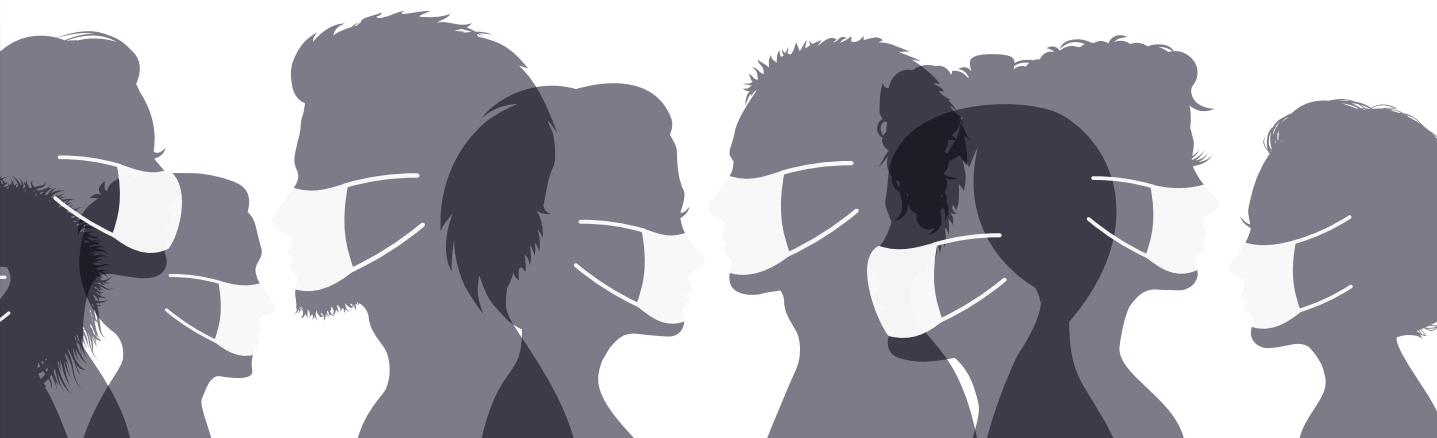


◎ 재정조기집행은 상반기 경기침체 방지 수단으로, 지속적인 집행관리가 필요하다.

집행관리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의 실집행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은 전달 단계가 복잡할수록 집행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집행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한승희, 2019). 둘째, 재정조기 집행 세부계획 수립 시 민간보조와 지자체 자본보조의 실집행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기집행을 달성에 지나치게 신경을 써 사업 추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 과정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기획재정부. (2019).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김원식. (2007). 「조기집행집행의 경제적 효과와 운영상 개편방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접속일 2020. 7. 24.).
- 한승희. (2019).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현황과 집행실적 분석」. 재정정보분석 19-04. 한국재정정보원.
- Aschauer, D.A. (1989). "Does Public Capital Crowd out Private Capital?"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4(2), 171-188.
- IMF. (2020).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 OECD. (2020). *OECD Economic Outlook*.
- Şen, Hüseyin and Ayşe Kaya. (2014). "Crowding-Out or Crowding-In? Analyzing the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on Private Investment in Turkey." *PANOECONOMICUS* 61(6), 631-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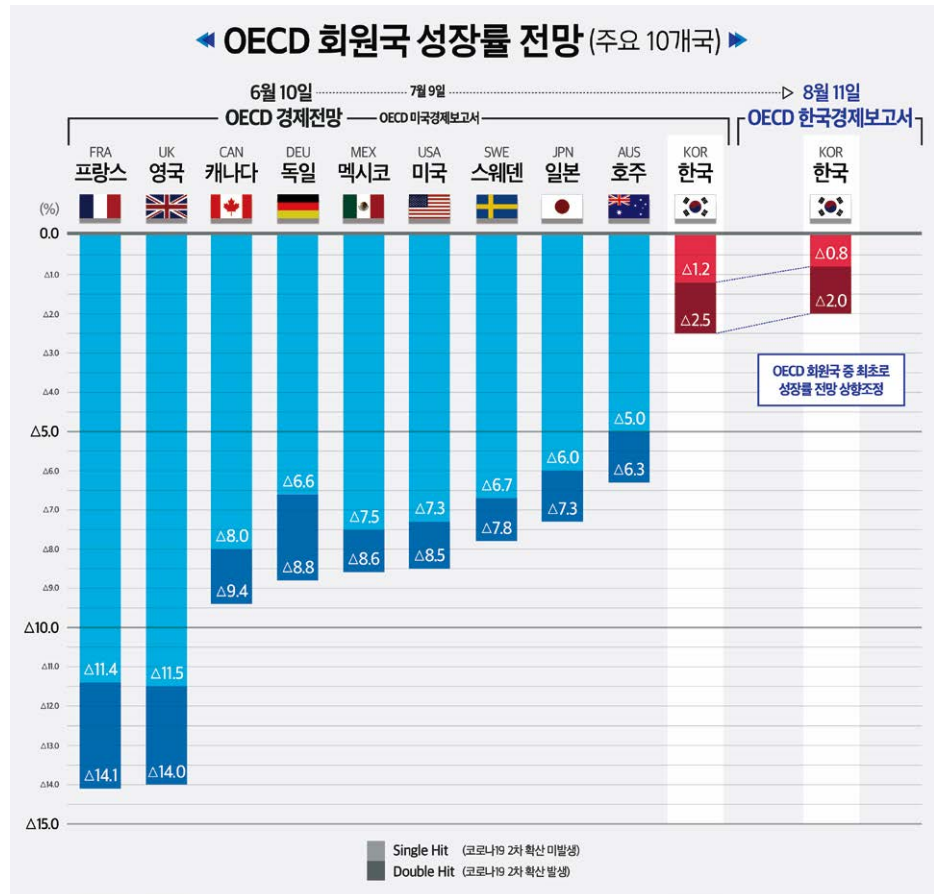
02
KPFIS-인사이드「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요약 — 2020. 8. 11.*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금번 「한국경제보고서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는 당초 5월경 발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 등을 반영하기 위해 8월로 연기되어 11일 발표되었다. OECD는 전 세계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코로나 19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적극적 대응을 펼쳐 OECD 회원국 중 가장 탁월한 경제성장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정성호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위원(jazzsh@kpfis.or.kr)



- 회원국 최초 경제성장을 상향조정,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은 회원국(37개 국가) 중 월등한 1위
-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에 성공,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
-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으로 탁월한 경제성적을 달성
- OECD의 핵심권고 중 다수가 이미 '한국판 뉴딜' 계획에 반영, 긍정적 역할 기대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8.11)

OECD의 한국경제 진단

OECD는 「2020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방역, 위기 대응, 경제성장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 더 자세한 내용은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을 참고

첫째, 한국은 신속·효과적인 방역조치로 코로나19를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효과적인 방역 전략이 바이러스 확산을 성공적으로 차단하였고,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극대화하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둘째, 적극적 위기 대응 정책으로 탁월한 경제성적을 달성하였다는 평가다.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경제충격을 완화해,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았다는 것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최초로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Delta 1.2\% \rightarrow \Delta 0.8\%$)되어 37개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인해 수출 전망을 하향조정했음에도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이 유효했다. 2020년 OECD 한국경제 전망치(2020. 6월 $\rightarrow$ 8월, Single-Hit 기준)에 따르면 GDP 전체 규모는 -1.2%에서 -0.8%로, GDP 구성요소 중 민간소비는 -4.1%에서 -3.6%로, 총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0.7%에서 2.9%로, 수출은 -2.6%에서 -5.7%로 각각 수정전망하고 있다.

그림 1. 시나리오별 세계경제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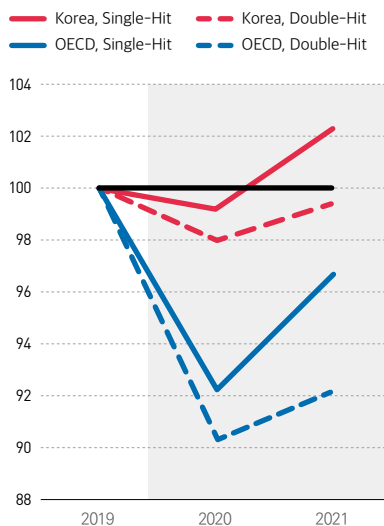


표 1. 2020~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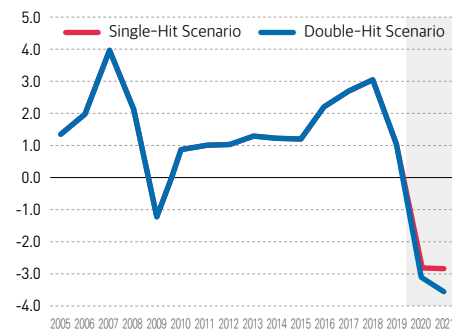
	2차 확산 미발생(Single-Hit)				2차 확산 발생(Double-Hit)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기존 전망	수정 전망	기존 전망	수정 전망	기존 전망	수정 전망	기존 전망	수정 전망
■ GDP	$\Delta 1.2$	$\Delta 0.8$	3.1	3.1	$\Delta 2.5$	$\Delta 2.0$	1.4	1.4
- 민간소비	$\Delta 4.1$	$\Delta 3.6$	4.8	3.7	$\Delta 5.6$	$\Delta 5.0$	2.9	1.7
- 총고정자본형성	$\Delta 0.7$	2.9	$\Delta 1.4$	1.4	$\Delta 1.2$	2.3	$\Delta 0.8$	1.0
- 수출	$\Delta 2.6$	$\Delta 5.7$	3.6	4.4	$\Delta 4.5$	$\Delta 7.6$	$\Delta 0.1$	0.7
- 실업률	4.5	4.3	4.4	4.3	4.6	4.4	4.7	4.5
- 소비자물가	0.5	0.3	0.3	0.3	0.5	0.3	0.2	0.1
- 경상수지 (GDP 대비 %)	3.0	2.2	3.0	2.1	2.6	1.9	2.0	1.1
- 재정수지 (GDP 대비 %)	$\Delta 2.9$	$\Delta 2.8$	$\Delta 2.6$	$\Delta 2.8$	$\Delta 3.2$	$\Delta 3.1$	$\Delta 3.3$	$\Delta 3.6$

자료: OECD 「2020년 한국경제보고서」 및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8.11)

셋째, 양호한 재정건전성(재정여력)을 바탕으로 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위기 대응에 적절했다는 평가다(그림 2, 3 참고). OECD는 시의적절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할 것과 경제성장을 제고를 위한 투자를 강조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라 공공지출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수입(세입) 증대 노력도 필요하다는 평가다.

그림 2. 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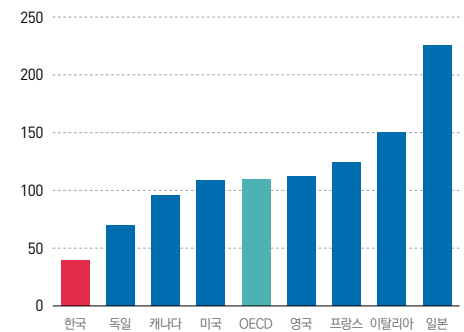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2020년 한국경제보고서」

그림 3. 정부부채

(단위: GDP 대비 %, 2019년 기준)



넷째, OECD는 「한국판 뉴딜」이 향후 경제회복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다. OECD는 「한국판 뉴딜」이 민관 시너지 촉진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 소개하고, 2025년까지 160조원(국비 114조원)의 예산 투입과 약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환경친화적·포용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 평가한다.

OECD의 정책적 권고

OECD는 금번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몇 가지 사안의 정책을 권고한다. 첫째, 코로나 19 영향 완화를 위한 거시경제 정책을 제안한다. 장기적인 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하되, 건전재정을 기반으로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특히, 5G·인공지능 등 디지털 부문)를 권고했다. 특히,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가계·기업 지원을 지속하고, 추가적인 소득 지원 시 저소득층에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유동성 지원을 넘어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예, 양적완화, 장기국채를 담보로 한 화폐발행)도 권고했다. 둘째, 코로나19와 고령화에 대비한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제안한다.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 시, 근로자의 재할과 일자리 복귀 지원에 부합해야 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절대 빈곤 고령층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의 추가 인상과 뉴딜에서 제시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기준 완화(폐지 권고)를 권고했다. 셋째, 코로나19 충격 극복과 생산성·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혁신 추진을 제안한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하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 변화를 위한 추가 대응을 권고했다. 세부 권고안을 보면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활용한 규제완화 및 환자 안전·진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한 비대면 의료 활성화를 권고했다. 그 밖에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일자리 고용 안정, 고령층 일자리 질 개선,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가 기추진 중인 역점과제에 해당한다. 이렇듯, 다양한 OECD의 정책권고는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검증기관 공인회계사가 바라본 e나라도움의 효과, 오해, 바람

허 웅 이정지유회계법인 이사(공인회계사)·행정학박사(heowoong@ejgy.co.kr)

“평균을 깎아 먹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은 그럴 리 없지만 옛날에는 시험 점수가 나쁜 학생에게 선생님이 “반 평균을 깎아 먹었다”고 핀잔을 주곤 했다. 재정 분야에선 국고보조금이 그랬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재정은 그 규모는 물론이고 투명성·효율성 측면에서도 장족의 발전을 했지만, 보조금은 늘 ‘눈먼 돈’이라는 낙인과 함께 재정 성과를 깎아 먹는 모양새였다. 그래서 정부가 ‘부정수급의 근원적 차단’을 목표로 2017년 7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전면 개통했다. 시스템 도입 3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선 어떤 변화가 있었고, 남은 숙제는 뭘까? 정부와 보조사업자 사이의 제3자이면서 동시에 누구보다 보조금 현장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보조금 회계 검증기관에 “지난 3년간의 변화를 ‘날 것 그대로’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며

2019년 상반기, “◇◇기관에서 관리하는 보조사업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니 검토해달라”고 요청받은 적이 있다. 2017년에 e나라도움¹으로 진행된 사업이었는데, 사업이 종료된 2018년 초에 일부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취소되었고, 이 취소된 세금계산서가 며칠 뒤 다시 발행되었는데 그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파악해 달라는 것이었다. 관련 금액은 1억원이 넘었다. 검토 결과, 관련자 A 씨는 ◇◇기관에서 관리하던 여러 보조사업의 책임자였고, 세금계산서가 취소·재발행된 거래처들은 모두 특정인물인 B 씨가 대표였다. 또한 이들 거래처는 A 씨와의 보조사업 거래 이외에는 이렇다 할 거래실적이 없었다. A와 B의 관계가 의심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A 씨는 동시에 △△기관 보조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세금계산서가 취소되고 재발행된 시점 사이에는 기획재정부의 부정수급 의심 통보가 있었다. 정황상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직전에 해당 거래를 취소했는데, 기획재정부와 e나라도움(한국재정정보원)에서 의심하기 시작하자 불가피하게 해당 거래를 다시 원상태로 돌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해졌다. 이후 해당 기관에 물어보니 추측대로였다. e나라도움 부정 징후 포착 로직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2 e나라도움 도입 효과

현행 규정상 보조사업자는 외부감사인을 통해 정산보고서를 검증받는데, 필자가 속한 회계법인인 다년간 e나라도움을 활용한 회계 검증(시스템 검증)과 예전 방식의 서류 검증 등 양쪽 방식을 모두 수행해본 경험이 있다. 검증기관² 입장에서 볼 때, 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은 과거 서류 정산 방식에 비해 부정수급 위험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확신한다. 이는 자금의 통제, 전자파일 형식의 증빙 관리, 보조사업간 정보 공유, 금액 산출의 정확성 및 자료의 체계적 관리의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인 것 같다.

¹ 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 등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² 검증기관이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첫째, 자금의 통제와 관련한 효과이다. 예전의 '선 지급 후 서류 정산'은, 통장에 먼저 보조금을 통째로 넣어주면 사용 후 종이 영수증을 첨부해 정산하는 방식이었다. 교부·집행·정산 구조상, 일괄 교부된 금액의 유용 또는 횡령³의 잠재적 위험이 상시 존재하고 있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 검증 업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보조금 사용의 권한이 전적으로 보조사업자에게 있었고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하게 되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보조금이 인출되기 때문에 유용 또는 횡령의 유인이 상당히 감소되었다. 보조사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보조금을 인출할 수 없다는 상황 자체가 유용 또는 횡령의 위험을 크게 축소시켰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전자파일 형식의 증빙 관리 효과이다. 예전 서류 정산 방식은 해당 회계연도의 보조사업 관리기관 및 감사인으로부터 집행 내역을 검토 받으면 정산이 끝났다. 정산 종료 후에는 증빙의 보관 문제 등으로 인해 해당부처 또는 감사원 등 감독기관의 감사가 쉽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조사업자들 사이에는 '해당연도 검토만 무사히 마치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에서는 증빙서류가 전자파일로 관리되며, 이에 대한 정보는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등의 데이터베이스와 공유될 수 있다. 또한, 관리 당국은 언제라도 사후 점검이 가능해졌다. 결국 '정산이 끝나도 언제든지 다시 집행 내역을 점검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 기능만으로도 보조사업자는 더욱 주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셋째, 보조사업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 효과이다. 과거 서류 정산 시기에는 특정 부처, 특정 기관, 특정 사업에서 발생한 다양한 정보의 교류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다양한 보조사업 관리기관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검증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상하게 겹치는 보조사업자도 있고, A 기관의 보조사업과 B 기관의 보조사업 사이에 물증은 없으나 심적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있었다. 또한, 특정한 사례는 보조사업 간에 공유될 필요성도 제기되곤 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보조금 사업의 서류 정산 내역을 일일이 비교·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e나라도움이 도입되면서 보조사업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 공유 및 통합관리가 가능해졌다. 문제적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나 특정인이 여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중복 수급이 어려워진 것이다.

³ 유용이란 사전적 의미로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쓴 것을 의미한다.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당초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해당 금액을 다시 보조금 계좌에 채워 넣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횡령이란 아예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 버리고 반환을 거부한 상황을 의미한다.



넷째, 금액 산출의 정확성 및 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진 효과이다. 예전 서류 정산 방식은 사업예산, 집행금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 금액의 집계 및 산출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가 부정확하게 작성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가 숫자나 회계 개념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계과정에서 금액 산출 오류가 빈번할 수밖에 없었다. 증빙 관리 부분에서도 과거에는 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관리가 불가능해 거래 내역과 증빙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았다. 하지만 e나라도움 도입 이후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휴먼에러(Human Error)가 발생할 소지가 제거되었고, 실무자 입장에서도 오류를 줄일 여러 가지 기술적 편의 기능이 탑재되었다. 또한, 거래건별로 증빙 내용의 입력 및 업로드가 가능해짐에 따라 증빙 관리 역시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점도 e나라도움 도입의 중요한 효과로 꼽을 수 있다.

3 ————— e나라도움에 대한 오해

e나라도움을 활용한 회계 검증을 수행하다 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e나라도움이 복잡해서 자금 인출이 어렵고 관련 증빙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것이다. 물론 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한 보조사업 담당자가 e나라도움에 증빙을 첨부하고 관련 정보의 입력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금 인출이 번거롭거나 관련 증빙이 너무



많다는 불만은 사실 e나라도움 도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 e나라도움이 도입된 지 3년이 넘다 보니 이런 불만도 이제 많이 줄었지만, e나라도움 사용의 어려움과 원활한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 절차를 혼동함에 따라 생기는 오해는 해소되어야 마땅하다.

첫 번째 오해는 e나라도움을 활용한 보조사업에서 자금 인출이 너무 번거롭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자금 인출이 번거롭거나 복잡해진 것이 아니다. 예전처럼 보조금을 전액 교부받은 상태에서 보조사업자가 마음대로 사용하던 것을 못하게 하자, 이를 “시스템이 복잡해졌다”고 오해하게 된 것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편법으로 e나라도움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기존 전액교부 방식과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 e나라도움에서 보조금을 ‘쉽게, 마구’ 인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함부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두 번째 오해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인데, 이를 시스템이 복잡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사실 보조금의 지출 성격에 따라 준비하여야 할 증빙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는 대부분 세무상 문제이거나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보조사업 관리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의 종류가 복잡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관리기관에 따라 지출의 내용을 세세하게 통제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관리기관의 성향과도 관련이 있다. 준비해야 하는 증빙의 종류가 많고 다양한 것은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해결할 사항인 것이다.

세 번째 오해는 “보조금 집행을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자 회계시스템과 e나라도움시스템 양쪽에 동일 내용을 입력하게 되므로 이중의 업무 부담이 든다”는 의견이다. 이는, 예전에는 일부 보조사업자의 경우 거래를 회계시스템이 입력하는 것은 ‘기장 대리 세무사’에게 맡기다가, e나라도움을 사용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어쩔 수 없이 시스템에 거래내역과 증빙을 입력하게 된 상황과도 관련된다. 또한, 예전 서류 정산 방식의 경우 보조



사업 기간 중에는 보조사업자 자체 회계시스템에만 입력하고 있다가 정산 시 관련 서류를 집계하여 제출하면 충분했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거래를 누가 입력할 것인지와 어느 시점에 기록하고 정리할 것인지의 문제이지, e나라도움 때문에 회계업무를 이중으로 처리하게 된 것은 아닌 것이다.

4 ————— e나라도움에 바라는 점

e나라도움의 도입으로 보조사업의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부정수급의 위험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e나라도움을 사용하는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관리기관, 감사인 등이 좀 더 원활하게 시스템을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중에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여기는 개선점은 국고보조사업과 지방비보조사업의 통일된 시스템 관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부 보조사업자의 경우 국고보조사업과 지방비보조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국고보조사업은 e나라도움 상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에 비해 지방비보조사업은 통일된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고보조사업비 집행 내역과 지방비보조사업비 집행 내역이 서로 연계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유사 보조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으며, 심지어는 증빙을 이중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나라도움에서 국고보조사업과 지방비보조사업의 집행 내역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5 ————— 마치며

이상으로 보조사업 회계 검증을 수행하는 감사인 입장에서 e나라도움의 효과, 오해 및 바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3년 전 e나라도움시스템 도입 초창기에 비해 현재는 보조사업자들의 혼란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e나라도움에 대한 불만과 오해가 아직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보조사업자들의 민원에 귀 기울여, 편의성을 높이는 작업에 매진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기관 및 회계 검증 수행하는 감사인의 의견도 경청해 개선 방향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보조사업 관리기관 및 감사인은 정부와 보조사업자 사이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e나라도움은 지난 3년간 ‘돈에 꼬리표를 달고, 보조사업간 칸막이를 없애는’ 등 시스템 도입 취지를 살리는데 적지 않은 성과를 내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사용의 편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더 분투하길 기대해 본다.



재정 데이터 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고유 업무

정성호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위원(jazzsh@kpfis.or.kr)

대한민국이 '데이터 기반 경제'로 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을 수립·발표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데이터 3법」이 통과돼 데이터 유통에 물꼬가 트였다. 지난달에는 데이터 경제의 액션플랜격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세계적으로도 미, 중, EU, 일본 등의 '데이터 패권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데이터 경제의 물결에 올라타 서퍼가 될 것인가, 아니면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기둥을 잡고 버틸 것인가?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재정정보원) 정성호 연구위원은 "재정정보원은 이 흐름에서 옆으로 비켜설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다"고 말한다. 재정정보원의 업무가 데이터 댐 운영 그 자체라는 것이다. "재정정보원 업무를 '재정 데이터 댐의 안정적 운영'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정부는 사업의 파급력·확장성을 기준으로 10대 과제¹를 제시했다. 그 첫 번째가 데이터 댐이었다. 국내 데이터 산업은 미국의 1/400일만큼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이다². 그래서 정부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투입되는 국비 114조원 가운데 18조원을 데이터 댐에 투입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일자리 190만개 중 39만개도 여기서 나온다. 한국판 뉴딜을 상징하는 간판급 과제답다. 하지만 다소 생경한 조어(造語)에 일부는 고개를 가웃했다. 데이터가 노동·자본을 능가하는 생산요소로 부상한 것은 알겠는데, 댐이라니? 더구나 한국판 뉴딜을 대표하는 사업이 댐 건설? 하지만 데이터 댐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데이터 댐이 간판 과제로 선정된 이유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잘 알다시피, 미국 뉴딜 정책의 대표사업은 후버댐 건설이었다. 댐을 짓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것은 물론이고, 건설 후에는 물을 가둬서 발전, 식수, 공업용수, 농업관개, 관광 등에 활용함으로써 대공황 타개에 큰 역할을 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댐은 데이터를 물처럼 모아서(수집), 넓고 빠른 수로(水路)인 5G 망을 통해 가공·분류·거래·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한다는 발상이다. 데이터 경제를 댐의 원리에 비유해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데다, ‘미국 뉴딜=후버댐 vs 한국 뉴딜=데이터 댐’이란 비유까지 덤으로 얻었으니 제법 괜찮은 작명이다.

그런데? 그래서 뭐 어찌라고? 즉, “데이터 댐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게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재정정보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란 질문이 나올 차례다.

결론부터 말하면, “관계 정도가 아니라 ‘재정 분야 데이터 댐’은 원래부터 재정정보원의 고유 업무”였다. 월간 『나라재정』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재정정보원은 dBrain·e나라도움이라는 2개의 재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생산된 방대한 재정 데이터를 검증·보관·분석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다만, 그동안은 이 업무를 ‘재정통계 생산·관리’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이런 유형의 데이터 흐름 업무를 ‘데이터 댐’이라고 정의했다. 재정정보원의 기존 데이터 관련 업무가 그대로 ‘재정 데이터 댐’이 되는 셈이다. 법과 정관도 그렇다. 「한국재정정보원법」 제5조와 한국재정정보원 정관 제4조에는 재정통계 업무에 대한 재정정보원의 의무가 명시돼 있다³. 따라서 재정정보원이 재정 데이터 댐을 축조·보수·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명확하다. 그럼 이제 재정 데이터 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후버댐과 데이터 댐을 살펴보자.

¹ 한국 뉴딜 10대 과제는 ① 데이터 댐 ② 지능형 정부 ③ 스마트 의료 ④ 스마트 스쿨 ⑤ 디지털 트윈 ⑥ 디지털 SOC ⑦ 스마트 그린 산단 ⑧ 그린 리모델링 ⑨ 그린 에너지 ⑩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이다.

² 2017년 기준 데이터 시장규모는 미국의 1/400, 데이터 기술력은 미국의 79% 수준이다.

³ 법 제5조 : 재정 관련 통계의 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재정정보시스템 보안 관제 등
정관 제4조 : 재정통계정보의 생산·분석·제공·연구, 재정정보 인터넷 포털 운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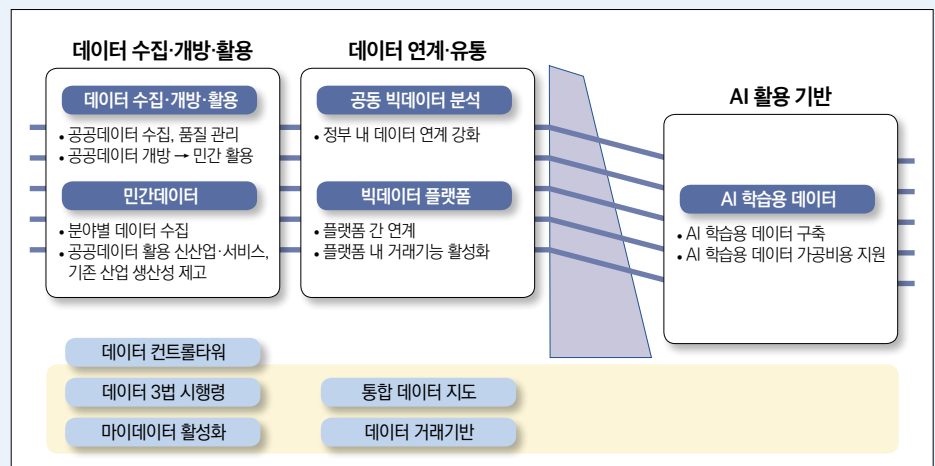
1 _____ 미국 뉴딜 정책의 상징 후버댐

콜로라도강을 수원으로 하는 후버댐은 1931년 착공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재임(1933~1945년) 시절인 1936년 완공되었다. 1933년 루스벨트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당시 미국 경제는 대공황 여파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었다. 루스벨트는 취임 직후 은행 회생, 통화 개혁, 실업 및 빈곤층 구제 등 뉴딜 정책을 수립·추진했으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 정부부터 추진해 오던 후버댐 건설 공사에도 박차를 가했다. 후버댐 건설은 5년간 2만 1000명의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 또한 건설 노동자의 유입으로 볼더시티가 조성되고, 인근에 유흥도시 라스베이거스가 융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후버댐은 불황 타개에만 머물지 않았다. 저수 용량이 320억톤(우리나라 소양강댐의 약 11배)이나 돼 홍수 방지는 물론이고 미국 서부 일대 지역에 관개용수 및 산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농업·공업 발전의 기반이 됐다. 실제 캘리포니아 농업은 거의 전적으로 후버댐에 의존해 성장했다. 아울러 전력산업, 관광산업, 도시 개발 등 다양한 산업을 일으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콘크리트 건축물로는 세계 최대 규모였기 때문에 건설 기술에도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후버댐 건설은 경제학 및 자본주의 역사를 '새로 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공공투자 사업을 통한 수요 창출의 모범사례가 된 것은 물론,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수정자본주의 및 케인스학파가 힘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2 ————— 한국 뉴딜의 대표선수 데이터 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후버댐에 비유한 데이터 댐을 전면에 내세웠다. 물론 데이터 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 댐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즉, 데이터를 물처럼 어느 한 곳에 ‘가둬 모으는’ 게 아니라, 정부·민간이 생산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일관되게 수집, 분류, 가공하여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둘 다 핵심 개념은 ‘흐름’이다. 댐이 수문·수로를 통해 물을 방류하듯 데이터 댐은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공급한다. 네트워크의 성능, 즉 넓이와 속도는 데이터 고속도로인 5G가 담당한다. 데이터와 네트워크에 이은 나머지 한 축은 인공지능(AI)이다. 데이터(Data)를 수집·가공·분류해 네트워크(Network)를 통해 수요자에게 내보내되, 이 업무 흐름의 전반을 최적화하는 것은 인공지능(AI)이 주도한다. 앞글자를 모으면 D·N·A 경제가 된다. 향후 글로벌 경제의 게임체인저는 이 D·N·A에 달려있고, 이를 결합해 최대한의 시너지를 내는 개념도가 바로 데이터 댐인 셈이다. 이런 흐름을 도식화하면 정부가 제시한 다음 그림이 된다.

그림 1. 데이터 댐 개념도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디지털 뉴딜(2020.7.14.)

이 개념도는 보다시피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데이터의 수집·개발·활용 측면에서 현재는 공공데이터가 4.9만개 정도만 개방돼 있는데, 이를 당장 내년까지 14.2만개로 늘린다. 민간데이터의 수집·활용도 지원한다. 이 경

우 2019년 16.8조원이던 데이터 시장은 2022년 30조원, 2025년 43조원으로 커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 예측이다.

둘째, 데이터의 연계·유통 측면에서는 기존에 10개를 구축 중이던 빅데이터 플랫폼을 30개로 확대한다. 또한 기관별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다른 기관 데이터와 연계해 분석할 수 있는 공동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도 구축한다.

셋째, 인공지능 활용 측면에서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1,300종 구축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와 가공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6,700개 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 수요가 많고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데이터, 예를 들어 말뭉치, 음성 데이터, 자율주행 영상 데이터 등이 대상이다.

물론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 댐은 막상 구축 이후에도 그 결과물이 눈에 보일 리 없고, 손에 잡힐 리 없을 것이다. 주소나 소재지도 없고 물리적 건축물도 없다. 그래서 정부는 데이터 댐은 생태계라고 설명한다. 데이터 댐은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D·N·A 생태계'라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한 것이 정부가 제시한 다음 개념도이다.

그림 2. D·N·A 생태계, 데이터 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합니다(2020.7.15.)

3 _____ 재정 데이터 댐 축조·관리를 위한 몇 가지 과제

재정정보원의 기존 ‘재정통계의 생산·관리’ 업무를 재정 데이터 댐으로 해석했다고 해서, 기존 업무를 기존 방식으로 수행하면 자동으로 재정 데이터 댐이 축조·관리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재정 데이터 댐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작동하려면 재정정보원은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할지 살펴보자.

① 재정 데이터 댐 업무단계별로 재정정보원 역할을 재정의해야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재정정보원은 데이터의 ‘수집·개발·활용, 연계·유통’ 등이 고유업무이다.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정 데이터 댐은 재정관리시스템 간 재정정보의 단순 통합 및 연계 정도에 머물러 있다. 향후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이 도입될 경우, 이러한 제약이 일정 부분 해소되겠지만, 이에 앞서 재정 데이터 댐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개발(가공 및 분석 톨로 정의)·활용, 연계·유통, AI 활용’으로 이뤄진 각 단계 고유의 역할·기능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수집 단계에서는 별도의 설정이나 추가적 입력 절차 없이도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바로 수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두 번째 개발 단계는 활용의 전 단계로서, 대국민 공개를 위해 원천자료(Raw Data)를 오류가 없도록 정제하고, 시스템 내부모듈에서 세수 추계 등의 분석 또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활용 단계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의 지능형 정부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연구자 및 국민들이 정보를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역할이 있다. 네 번째 연계 단계에서는 dBrain 사용기관과 연계기관(예, dBrain 연계 사용기관 또는 미사용 연계기관) 간 더욱 체계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개별 재정관리시스템(예, dBrain, e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하 e호조), 지방교육재정관리시스템(K-에듀파인) 등) 간 표준정보가 필수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유통은 기관 간 정보의 상호 교환, 요청 및 제공이 자유로워야 한다(③ 「데이터기반행정법」 참고). 끝으로, AI 활용은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재정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기능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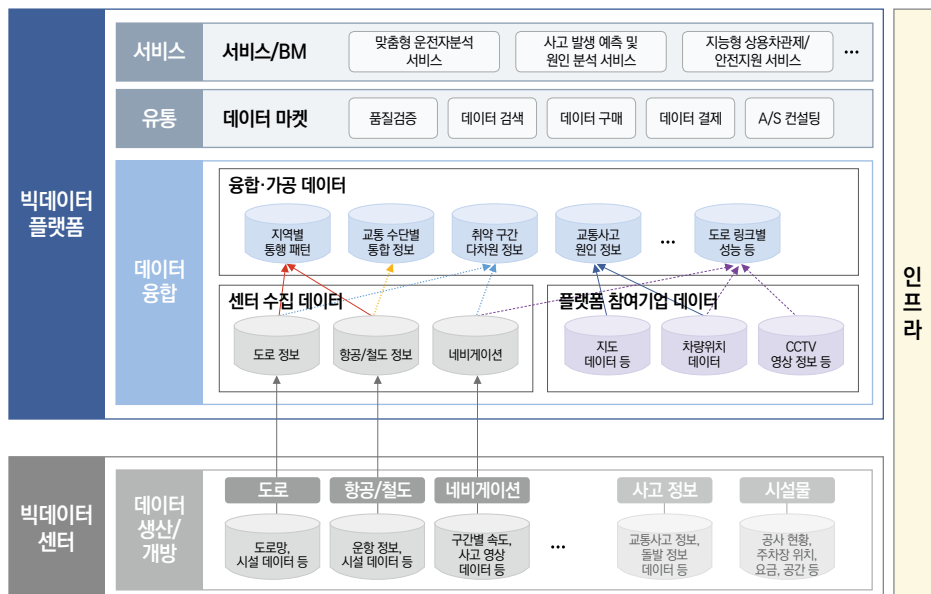
데이터 댐을 디지털 생태계로 보든 디지털 인프라로 이해하든, ‘관리 단위’로는 플랫폼 형태를 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부는 금융·교통 등 10개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중⁴ 인

⁴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소비, 통신, 중소기업, 지역경제, 산림이 포함된다.

데, 이번 한국판 뉴딜에서 이를 3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구축 분야는 주력 사업, 혁신성장 동력 분야, 유망 서비스업 등을 고려해 추후에 선정하기로 했다. 물론 재정 데이터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특성상 시장에서의 활용 및 거래가 매우 제한적 이어서 추가 구축 분야에 포함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 물론 시장에서의 활용성이나 민간 파급력을 이유로 30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배제된다고 해도, 데이터의 수집·가공·활용은 본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재정 데이터 댐은 이들 플랫폼과 유사한 형태로 축조·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기존에 추진 중인 플랫폼은 데이터의 생산·관리는 센터가 담당하고, 센터가 생산한 데이터의 수집·분석·유통은 플랫폼이 담당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도로·항공·철도 등의 공공기관과 지도·내비게이션·주차장·영상정보업체 등이 각각 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센터가 된다. 이 센터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수집·분석·유통하는 업무는 교통 플랫폼이 맡는다. 센터들은 물류 플랫폼에도 데이터를 제공할테고, 교통 플랫폼과 물류 플랫폼 간 연계도 추진될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이 된다. 재정 데이터도 여러 센터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플랫폼에서 수집·분석·유통하게 될 것이다.

그림 3. 교통 플랫폼에서 데이터의 생산·융합·유통·서비스 흐름도와 센터·플랫폼의 역할



자료: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2019.1.16.)

③ 「데이터 3법」, 데이터 기반 행정법 등 변경된 법제도 대응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이달 초 시행에 들어간 「데이터 3법」⁵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름·주소 등을 비식별처리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만 한다면 이들 정보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정보를 비식별처리해서 2021~2023년에 대규모로 공개·개방할 계획⁶이기 때문에, 재정 데이터 맵에서 보조금 정보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dBrain 등의 민감 정보도 역시 그동안은 보안을 위해 암호화에 신경썼다면, 이제 비식별화를 통한 결합분석 등 활용 기반 구축으로 업무 반경을 넓혀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이 법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이 행정 및 공공기관에 데이터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요청받은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의 양은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양질의 데이터는 일관성, 정합성, 적시성 등 세 가지 요소를 지녀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즉, 품질관리가 되지 않은 오류 있는 데이터는 홍수 시 댐 위에 떠 있는 부유물에 불과하다. 어떤 데이터를 받아 내부 데이터와 결합해 활용할 것인지, 반대로 어떤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줄 것인지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⁵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포함된다.

⁶ 사용자 정보, 공모 정보, 세부사업 정보, 연장평가 정보, 교부반납 정보 등 25종을 2021~2023년에 추가로 공개 및 개방 예정이다.

④ 재정 데이터 분절성 극복을 위한 거버넌스 모색

현재 재정 데이터는 중앙정부 재정을 총괄하는 dBrain 기반의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총괄하는 e호조 기반의 지방재정365(lofin.mois.go.kr),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청 재정을 공개하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 등에 산재돼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국고보조금 정보를 'e나라도움 포털'에 통합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행복e음 등 여러 사회보장 부문의 재정 데이터가 분산돼 있다. 이들 데이터 간 연동은 물론 연계마저 취약하고,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도 개별적·분절적이다. 재정 거버넌스의 분절성은 재정정보의 분절성으로 이어지고, 결국 재정정책의 분절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재정 빅데이터 플랫폼은 당연히 중앙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등을 통괄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 필요성이나 총론에는 모든 부처·기관이 동의한다. 하지만 막상 각론에 이르면 10여 년 전 dBrain 구축 당시나 지금이나 한발짝 떼기도 쉽지 않은 것이 재정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이다.

4 _____ 재정 데이터 댐을 지향하는 차세대 dBrain 시스템

다행스러운 것은 데이터 댐의 개념과 기능이, 기획재정부가 구축중인 차세대 dBrain 시스템 설계도에 제법 반영돼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 댐이란 용어만 없을 뿐이지, 차세대 dBrain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을 기반으로 △재정 업무 효율화 △재정 관리 범위 확대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시스템의 구현 등을 겨냥한다. 차세대 dBrain은 특히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에서 매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조직을 △수집을 담당할 센터 △융합·가공을 담당할 플랫폼 △유통 업무를 맡는 거래소 △유통 이력을 관리하는 거래정보저장소 등으로 매우 세분화해 제시한다. 또한, 시스템 운영계 이외에 정보계와 지식계⁷를 통해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베이스, 스토어, 레이크, 마트 등의 개념과 기능을 담았다. 데이터 연계도 시간별로 상시와 임시, 공유 단계별로 공개·공유(General·Shared), 형식별로 통합·등록·상생·집중 등을 구분해 구축 중이다. 다루는 데이터도 광범위하다. 재정 데이터를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 거시 지표·행정지표도 통합·연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⁷ 정보계: ODS(Operational Data Store), DW(Data Warehouse), DM(Data Mart)
지식계: DL(Data Lake), KB(Knowledge Base), KR(Knowledge Repository)

따라서 재정 데이터 댐 구축·관리 관련한 재정정보원 업무는 우선, 차세대 dBrain 시스템의 구축 과정에서 데이터 댐 관련 주요 기능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인지에서 시작해야 한다. 재정 데이터 연계, 통합 데이터 산출, 맞춤형 데이터 제공, 데이터 통합분석,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이후 운영 과정에서 데이터 댐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직·인력·훈련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물론 데이터 연계성을 명(名)에서도 실(實)에서도 확실하게 확보해 정책분절성 극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재정 데이터 댐이 창출할 최종 가치는 추계와 예측일 것이다. 이제 재정정보원은 ‘재정 데이터 댐의 구축과 운영’이라는 명확한 비전 아래 각 본부 및 부의 역할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보원은 시스템 운영회사를 넘어 데이터 회사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뉴딜이 데이터 경제를 댐에 비유해 손에 잡히도록 쉽게 이해시키고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된 것처럼, 재정 데이터 댐 개념 및 정부의 뉴딜 의지가 차세대 지향성의 정립, 분절적 거버넌스 간 협조, 센터·플랫폼 간 유기적 연결, 재정정보원 업무 정의 등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치된 상황 인식은 그 자체가 실행 동력이 되기도 한다.

민간·공공, 데이터 댐 향해 잔걸음

판이 깔리자 민·관 공히 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는 선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의 ‘한국판 뉴딜’ 자료를 보면 제도 개선, 즉 법을 개정하고, 투자·진입을 허용하고, 세제·보조금 등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빼곡하다. 민간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데이터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없던 시장이 생기는 셈이다.

Naver가 가장 빨랐다. Naver는 “지난 20년간 축적한 데이터가 모여있는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이야말로 데이터 댐”이라며 “이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으로 분석·가공해 국민에게 클라우드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말에는 데이터 댐 건설을 위해 4개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KT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자사의 혁신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

하는 플랫폼을 다음 달 선보일 예정이다. 데이터 댐의 데이터를 서비스로까지 연결해 선보이

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KT, SK텔레콤, LGU+ 등 통신사들도 최근 본사 또는 자

회사가 잇따라 데이터거래소에 거래참가 등록을 마쳤다. 데이터 댐의 데이터

수집·유통·활용 기능 중에서 일단 유통 분야에서 첫발을 떤는 형국이다.

‘바이오연구 데이터 댐’, ‘섬 데이터 댐’ 등을 구축할 필요성도 관련 기관·

국회 등에서 나왔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민관의 데이터

댐 축조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해주기 위해 8월부터 ‘데이터

댐 옴부즈만’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①

디지털 뉴딜과 빈곤한 상상력의 극복

고길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kilkon@snu.ac.kr)



디지털 뉴딜이 최근 화두이다. 원래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뉴딜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에도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것은 아니었으니 21세기 한국에서 디지털 뉴딜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구글에서 데이터 댐(Data Dam)이라는 용어를 검색해보면 한국어로 된 문서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디지털 트윈이란 단어도, 지능형 정부라는 단어도 우리에게 쉽사리 와닿지 않는 단어들이다. 이렇게 보면 디지털 뉴딜이라는 용어는 녹색 성장, 창조경제와 같이 정부의 빈곤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신조어에 불과할 수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처럼 빈곤한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뉴딜을 긍정의 결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설사 의도하지 않은 것이더라도 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데이터 포털 개발에 대해 많은 사람이 실패를 예견했고, 실제로도 원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크게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 공공데이터 포털이 도입되면서 많은 공공기관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받아들였고, 오픈 API 형식의 공유와 링크가 가능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작지만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한국은행 경제정보 포털, 국가통계 포털과 같은 곳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 공개가 시작되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순식간에 마스크 판매 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도 축적된 데이터에 링크 기술이 결합되었기 때문이었다. 공공데이터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가지고 추진한 정책이 생각하지도 못한 긍정적 효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한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들을 해볼 수 있다. 첫째, 과연 데이터 댐을 만들면 부가가치가 만들어질까? 중국의 디디추싱(滴滴出行)은 차량공유 모바일 앱 서비스 회사로 중국 전체시장의 93% 이상을 차지한다. 매일 100TB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엄청난 양의 개인화된 이동 및 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독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디디추싱은 훌륭한 데이터 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창업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해왔고 2018년에만 18억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데이터 댐에 누군가가 방대한 데이터를 채워줄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생산할 주체와 이것을 구매할 주체가 없다면 디지털 뉴딜은 노딜(No Deal)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누가 디지털 뉴딜의 일꾼이 될 것인가? 2019년 4분기 일자리행정통계 분석 자료를 보면 30대 일자리가 2.4만개가 줄어든 반면, 50대 이상의 일자리는 51만개가 증가하였다. 이 중 30.3만개는 60대 이상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였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훨씬 뛰어난 디지털 감각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들의 능력은 고용시장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노인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물론 아직도 회사에서 영수증을 풀로 붙이고, 불필요한 결재문서를 만드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많으니 굳이 고급의 디지털 인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디지털 인재가 있더라도 과연 이들을 알아봐 줄 채용자가 얼마나 많을까? 채용자가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도(Specificity) 개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공지능 인재를 구별할 수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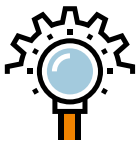
인재를 데려온다 치더라도 당장 수익을 창출하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인재가 조직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젊은 인재들을 기존 조직의 틀에 가두려고 한다면 사회는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리더들을 만들어 낼 수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디지털 뉴딜의 미래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교육 분야 디지털 뉴딜을 보면 컴퓨터나 와이파이 인프라존 구축 같은 하드웨어 일색의 이야기들이다. 대용량 자료 전송과 보안이 핵심 키워드가 되어가는 5G 시대에 와이파이 존을 확장하겠다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일단 접어두자. 우수한 디지털 인재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고 대학교육 현장은 대학 내부의 학과 간 고질적 이기주의와 교육부의 통제로 혁신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뉴딜의 인재를 대학 스스로 양성하는 것이 가능할지조차 의심스럽다. 디지털 일꾼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셋째, 디지털 시대의 기술은 인공지능만 있을까? 인공지능이 디지털 시대를 대표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분석된 결과를 멋지게 시각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소비자들을 마케팅하는 것도 필요하다. 디지털 정보를 이용해서 상품을 만드는 장인보다는 오히려 이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제품을 어떻게 브랜드화하고 유통하는지가 진정한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일 수 있는 만큼 인공지능이나 코딩 기술 정도를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지식으로 편협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내수공업 시대의 기술만 보유했던 장인이 산업혁명 이후 사라진 예를 보라. 앞으로의 디지털 뉴딜 시대에는 인공지능을 넘어서 더욱 다양한 기술이 요구될 것이다. 실제로 업무 현장에서는 수십 테라바이트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몇십 메가바이트 자료라도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핵심은 기존의 생산방식의 변화, 가치사슬의 변화, 그리고 소비 방식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직의 생존을 위해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문제이다. 따라서 디지털 뉴딜 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인공지능이라는 단편적 기술에 한정시켜서는 안 되고 다양한 융복합 기술과 삶의 방식까지의 변화를 포괄하는 기술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넷째, 디지털 가치사슬(Digital Value Chain, 이하 DVC)이 변하는데 기존의 고용이나 기업 간 계약 방식이 여전히 유효할까? 제품 디자인, 생산, 유통, 마케팅, 소비자의 제품 구매 및 체험 등의 각 단계에서 디지털 기술이 내재화되는 DVC가 만들어진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산업 자체의 가치사슬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가치사슬의 변화는 기업 간 계약 관계, 노사관계, 개인의 노동 방식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이분법적 구분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으며, 인도 코딩 전문가를 고용해 만든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생산한 상품을 미국 아마존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고, 판매 분석 정보를 프리랜서로 일하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에 맡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가치사슬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계약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만 기존의 경직적 계약법 틀이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거래 방식과 계약과 관련된 새로운 상상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섯째,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최선일까?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자료 비공개와 저작권 문제일 것이다. 정부가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한 경우가 많다. 사실 기업들은 이미 이런 정보를 가지고 드러나지 않게 많은 가공을 하고 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려 하고 있다. 반면 기업이 생산하고 가공하는 데이터의 상당 부분은 개인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정보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이 정보의 소유권이 반드시 기업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결과 소유권이 모호한 정보에 바탕을 두어 생산되는 각종 서비스와 디지털 상품을 시장에서 거래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디지털 뉴딜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명확히 하거나, 개인정보 사용 필요성의 입증 책임을 기업에 부여하거나, 수집된 정보의 보유 기간을 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 정책을 구성하는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바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들은 아니며 비록 실패하더라도 그 책임이 계획을 잘못된 정부에 있는지, 아니면 사업을 실현하는 기업에 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디지털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가들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뉴딜이 성공할 수 있도록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정책의 내용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2

행정 빅데이터로 디지털 뉴딜을 열자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genswoo@gmail.com)



코로나19 사태로 행정 데이터의 중요성이 관심을 받고 있다. 크게 보면 두 장면을 들 수 있다. 접촉자에 대한 추적 조사가 좋은 예이다. 이른바 콘택트 트레이싱(Contact Tracing)은 행정 자료와 민간 정보를 결합하여 세계가 칭찬했던 K-방역의 주춧돌이 되었다. 정부가 감염자와 접촉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이를 방역에 활용한 것이다.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 감염자의 존재를 확인해줄 뿐만 아니라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여 잠재적으로 감염되었을 수 있는 국민들의 검사 행위를 유도한 것이다. 폐쇄 회로 카메라, 신용카드, 휴대폰의 접속 기록들을 확인하여 접촉자들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역시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감염자의 자기보고를 넘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한편 마스크 공급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마스크 수급 데이터를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마스크 공급 현황을 제공하는 앱이 만들어졌다. 국민들은 마스크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마스크를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물론,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 자료와 민간 자료를 결합한 추적 조사의 결과는 전 세계가 칭송하는 K-방역 그 자체가 되었다.



이러한 추적조사가 가능했던 것은 2015년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감염병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놓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에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정비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4조의 2에 근거하여 감염병 위기 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덕분에 개인정보 공개의 불법성에 대한 논란을 피해갈 수 있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행정 자료가 사용된 두 번째 사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과정이다. 지난 3, 4월의 긴급재난지원금의 논의를 생각해보자. 당시 지급 기준이 50%가 맞냐, 70%가 되는 것이 맞냐를 두고 지루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사실 실무입장에서 문제는 선별 지급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선별 지급을 한다고 해도 과연 선별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처음

에는 사회보장정보원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서울시가 이미 기준중위소득 100%, 즉 서울시민 50%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도 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e음을 사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혜자가 신청을 해야 한다. 재난적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전가구로부터 신청을 받고 이를 조사해 50% 혹은 70%를 선별한다는 것이 무리였다. 비교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도 저소득 가구의 지원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어서 전 국민에게 적용했을 때 설득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사회보험 중에 가장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다. 월급 받는 근로소득자야 최근까지 보험료 납부 실적이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는 2년 전 소득 밖에는 없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소득이 괜찮았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반대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 행정 자료를 사용했지만 문제가 정작 닥쳤을 때에는 해결할 수가 없었다. 결국에는 정치적 과정을 거쳐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다행히 지급 과정에서는 행정 자료가 큰 역할을 했다. 일단 모든 가구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되면서 이름을 '재난' 지원금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국고보조금법」과 재난 관련 법에 근거하여 지급 단위를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 세대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문제는 2천 2백만 대상 가구의 접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서버 시설은 어느 곳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서버 분산을 위해 신용카드 회사가 신청을 받도록 획기적 조치를 하였다. 카드사가 신청을 받으면 그 정보를 행정안전부 서버에 보내고 행정안전부 서버는 신청자의 자격 여부와 가족 구성원



행정 자료를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생활은 편안해지고, 정책의 신뢰성은 높아질 수 있다. 때마침 정부에서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ICT 기반으로 초격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수, 그리고 지급액을 알려주었다. 카드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 포인트를 제공하고, 수혜자는 그 금액을 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면 되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들은 별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 민간과 정부의 데이터 사용에 있어서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덕분에 행정안전부의 국민 인지도와 만족도는 상당히 올라갔다고 한다.

이처럼 행정자료를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생활은 편안해지고, 정책의 신뢰성은 높아질 수 있다. 때마침 정부에서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ICT 기반으로 초격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으로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인공 기반 지능형 정부를 10대 계획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에 쌓여 있는 수많은 행정 자료들을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디지털 뉴딜로 가는 길은 훨씬 수월할 것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일정 정도 지킬 수 있는 한에서 정부 내에서의 행정 자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디지털 뉴딜의 시작이다.



툇아보다 : 살살이 훑어 나가면서 살피다

한국판 뉴딜 중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10대 대표 과제

우상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woosh@kpfis.or.kr)

2025년까지 총사업비 100.9조원(국비 68.7조원) 지원 및 일자리 111.1만개 창출

(단위: 조원, 만개)

디지털 뉴딜(3개)			그린 뉴딜(3개)		
과제	총사업비(국비)	일자리	과제	총사업비(국비)	일자리
① 데이터 댐	18.1(15.5)	38.9	⑧ 그린 리모델링	5.4(3.0)	12.4
② 지능형(AI) 정부	9.7(9.7)	9.1	⑨ 그린 에너지	11.3(9.2)	3.8
③ 스마트 의료 인프라	0.2(0.1)	0.2	⑩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20.3(13.1)	15.1

융합 과제(4개)		
과제	총사업비(국비)	일자리
④ 그린 스마트 스쿨	15.3(3.4)	12.4
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1.8(1.5)	1.6
⑥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14.8(10.0)	14.3
⑦ 스마트 그린 산단	4.0(3.2)	3.3



데이터 댐

-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전산업 5G·AI 융합 확산
 -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10 → 30개)
 - 5G 망 조기구축 세제지원 추진
 - 생활 밀접 분야 AI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 등

지능형(AI)
정부

- 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
 - 비대면 공공서비스 제공
 - 블록체인 기술 적용 시범 서비스 확산
 - 공공정보시스템의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 이전·전환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 구축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 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실증 추진 등



- 안전·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 초중고 전 교실 와이파이 조기구축
 -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 등 노후 학교 리모델링



-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 공간·항만·댐 대상 '디지털 트윈' 구축
 - 고해상도 영상지도 작성 및 정밀 도로지도 구축
 - 항만시설 모니터링 디지털 플랫폼 구축
 -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 등



- 국민이 보다 안전·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마련
 -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및 4세대 철도 무선망 구축
 - 상수도 스마트화
 -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생산성(스마트), 고효율·저오염(그린)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 공간으로 전환
 -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 스마트 생태공장 및 클린팩토리 구축
 -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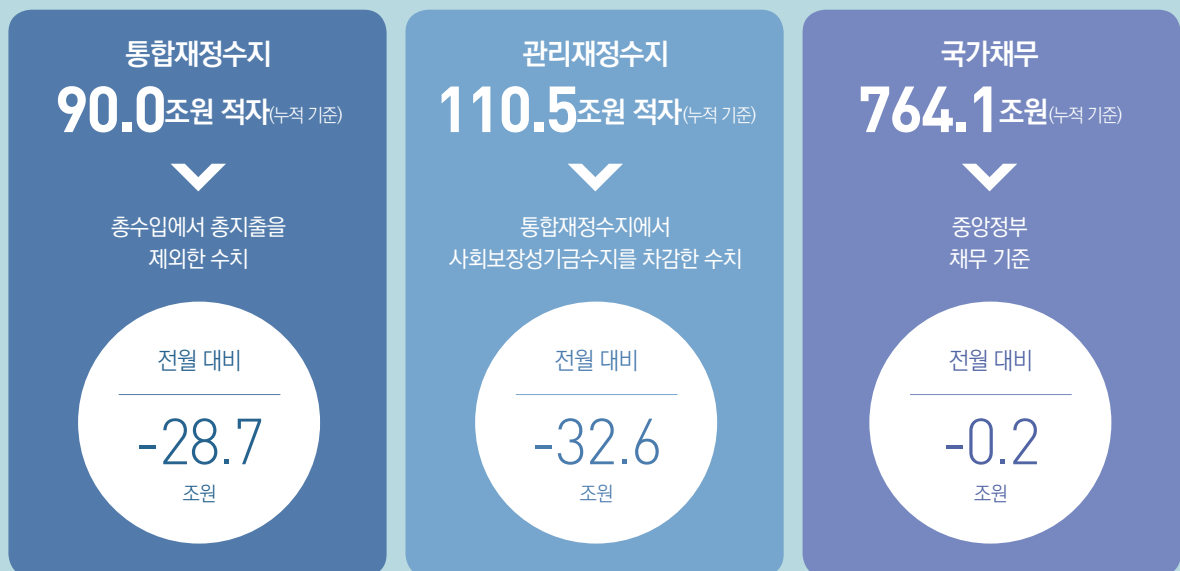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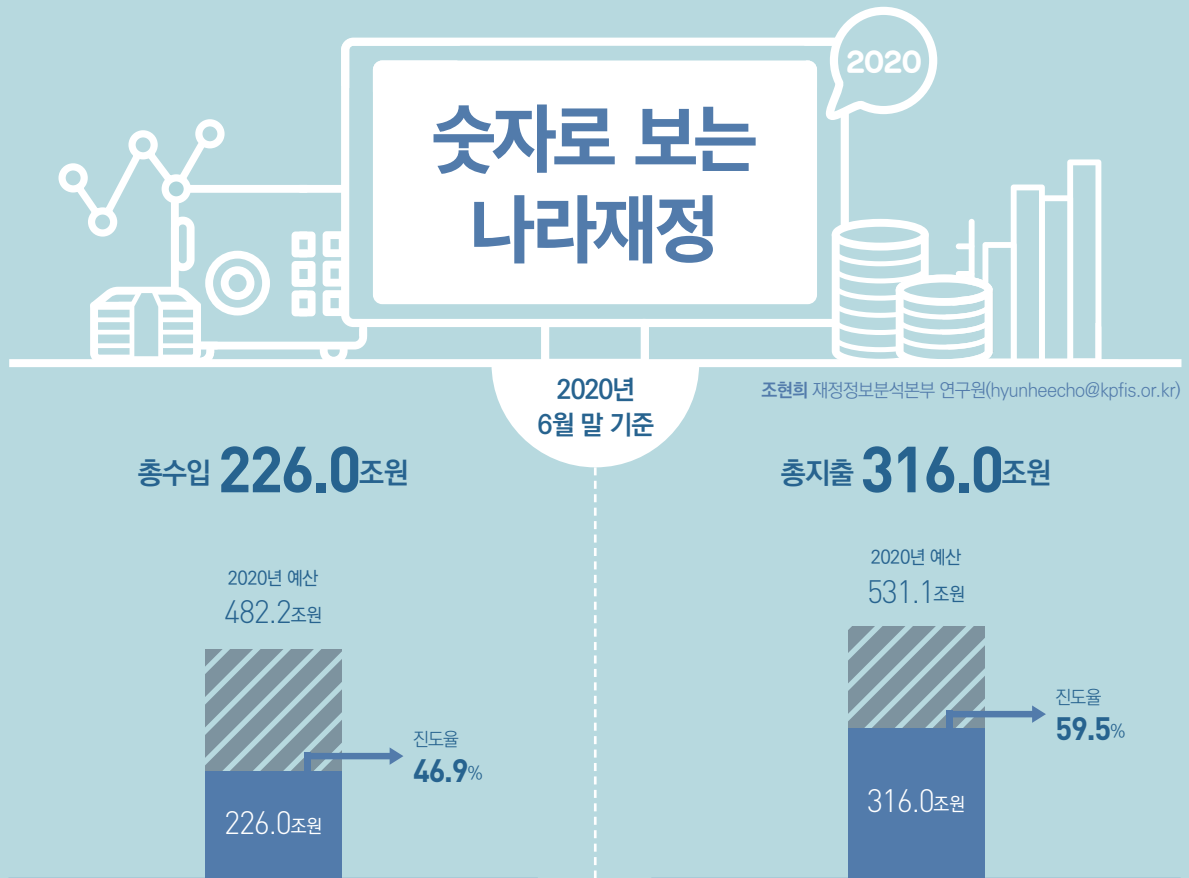
-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
 - 노후 건축물 태양광 설치 및 고성능 단열재 교체
 - 에너지 고효율 국공립 어린이집 및 국민체육센터 신축
 - 문화시설 에너지 저감설비 설치 등



-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
 - 해상풍력단지 입지 발굴 추진
 - 수소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 조성
 -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 예상 지역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환 지원



-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 전기·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 노후경유차·건설기계·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 노후선박 친환경 전환
 - 수소차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개발 추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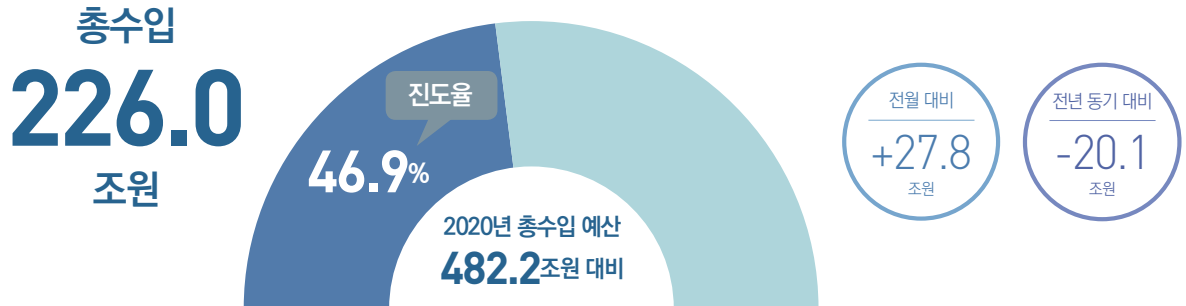
주 1) 2020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0.8.

총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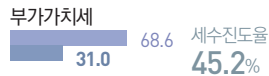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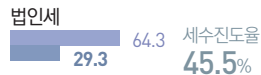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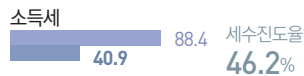
• 2020년 6월 말 기준



주 1)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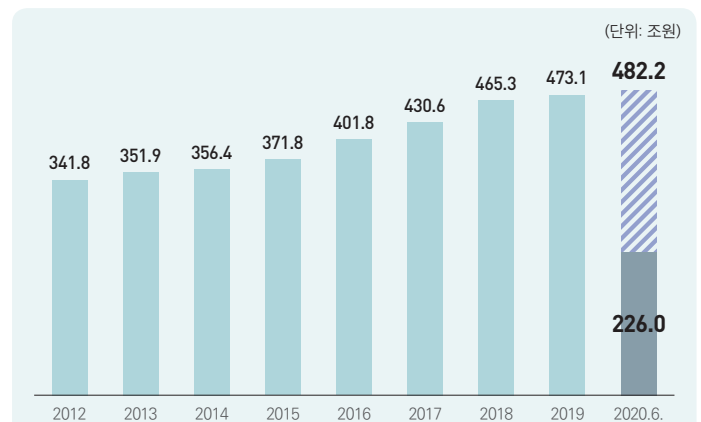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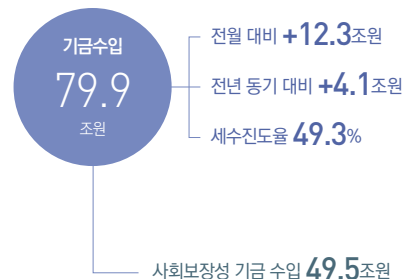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 2020년 예산
■ 2020년 6월

주 1) 세수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대비 당월 누계 세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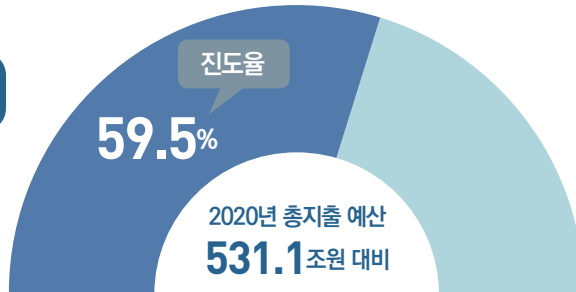
주: 2019년까지는 결산, 2020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총 지출

• 2020년 6월 말 기준

총지출
316.0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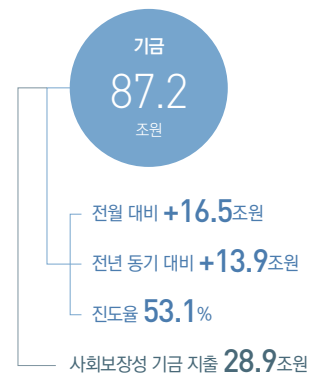
전월 대비
+56.5
조원

전년 동기 대비
+31.4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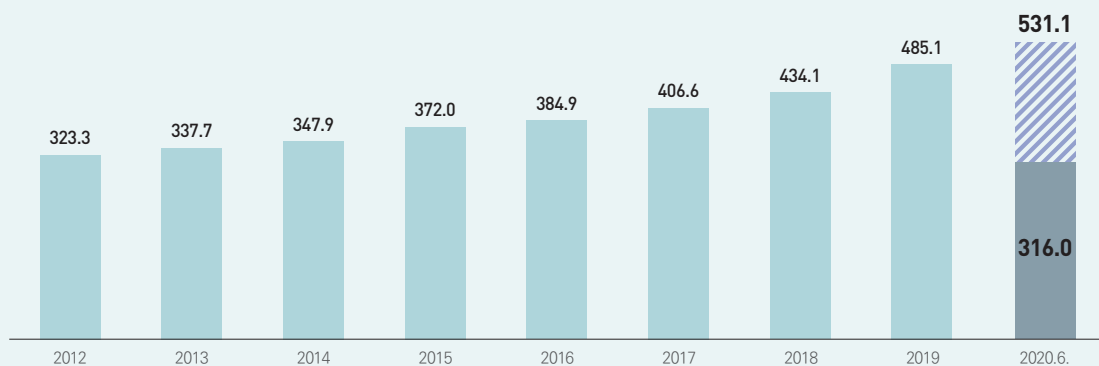
주 1)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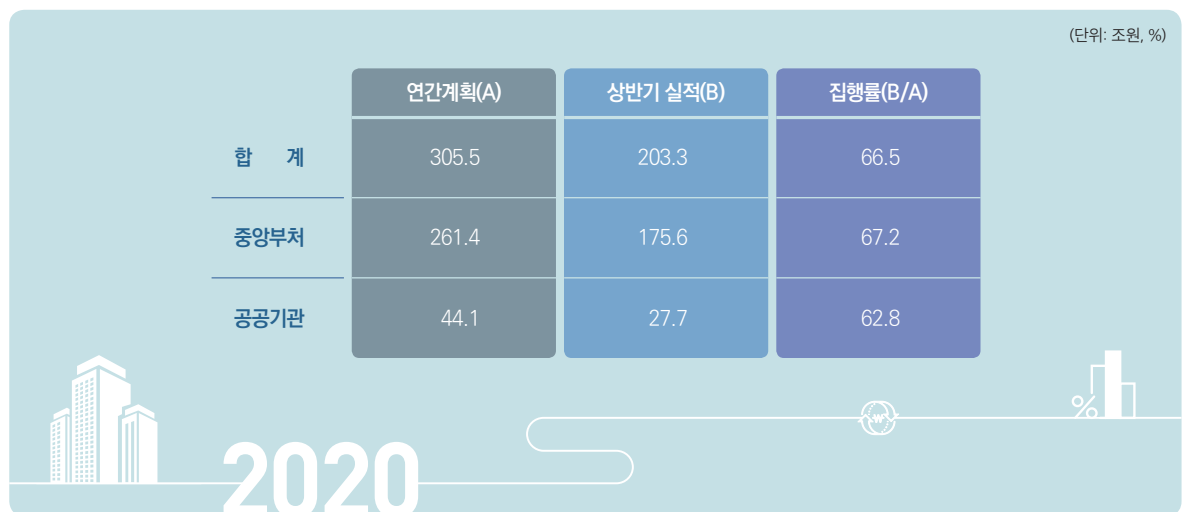


주: 2019년까지는 결산, 2020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연간계획 대비 **66.5%**



상위 5개 부처

(누적 기준)

(단위: 조원, %)

	부처명	상반기 실적	집행률
1	중소벤처기업부	11.8	93.8
2	고용노동부	3.5	86.3
3	산업통상자원부	6.3	77.7
4	보건복지부	15.1	73.0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7	70.3

주 1)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45개 중앙행정기관과 39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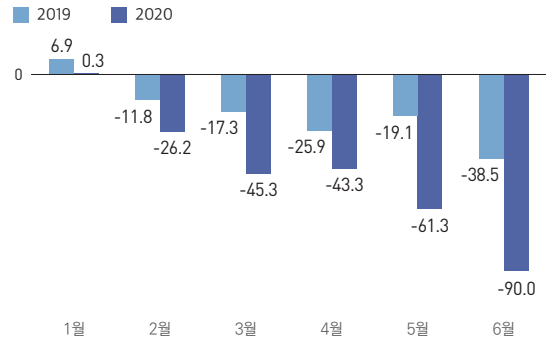
2) 집행률은 해당 연도의 연간 계획 대비 당월 누계 실적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재정수지

• 2020년 6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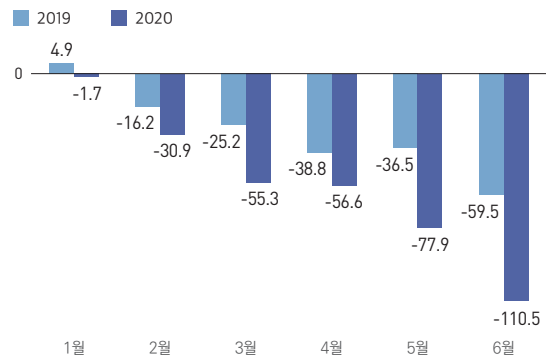
통합재정수지

90.0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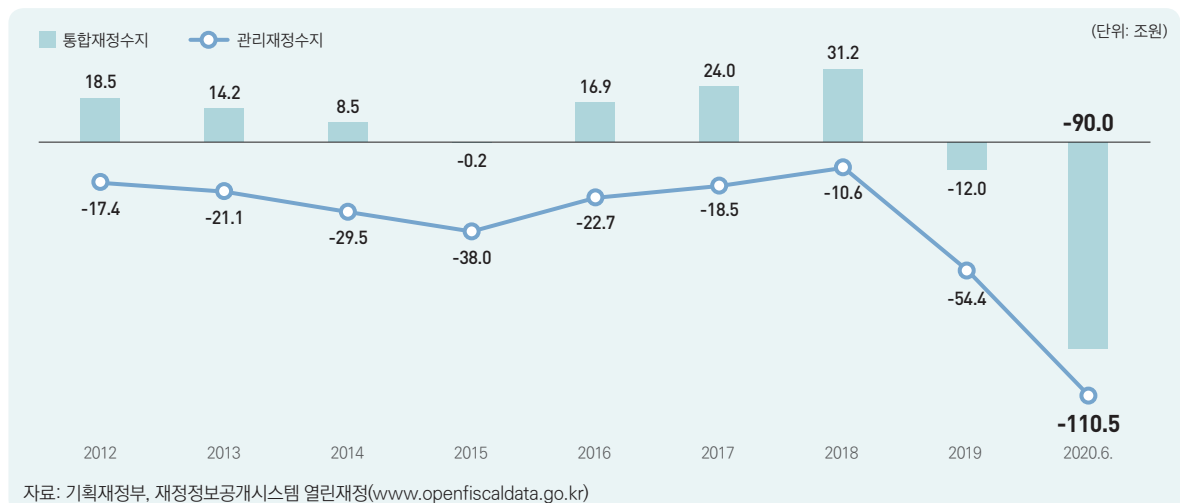
110.5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0.5조원 흑자

-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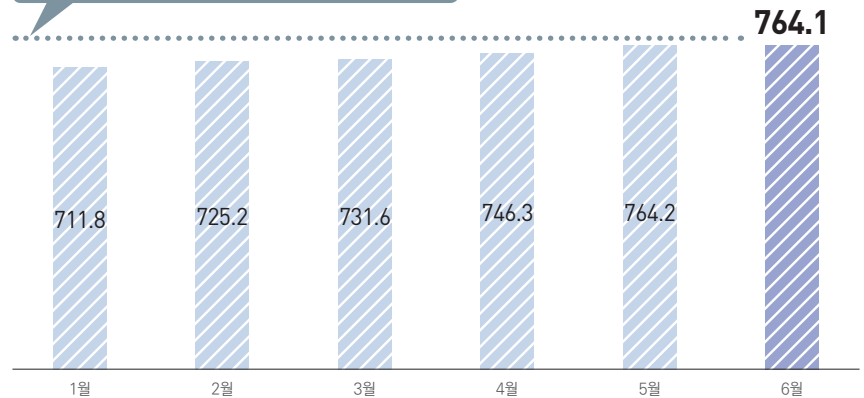
국 가 채 무

• 2020년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764.1조원

2020년 예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 787.0조원



전월 대비

-0.2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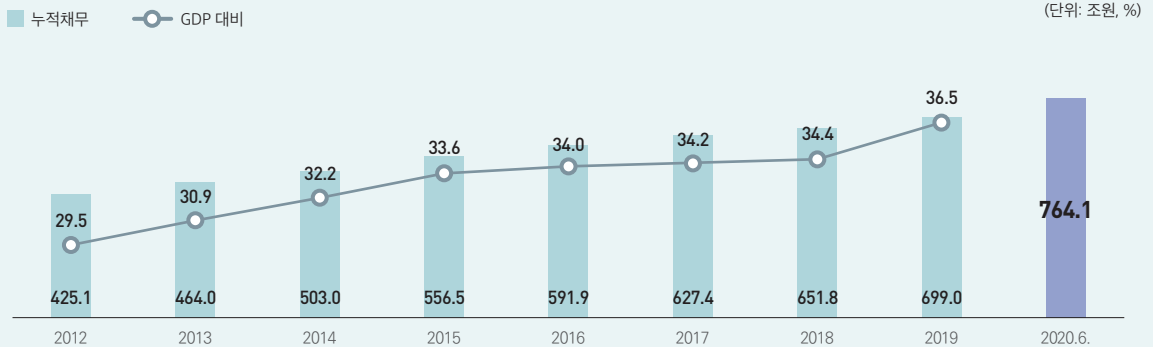
전년 대비

+65.1

조원

주 1)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로 구성. 현재 지방정부 채무 통계는 결산기준으로 연 1회 산출되므로 월별 추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공개함(2018년 국가채무는 680.5조원이며, 그중 지방정부 채무는 32.7조원임)
2) 2020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3) 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은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와 재정 관련 보고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종합 재정정보공개 플랫폼입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재정통계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전규식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gsjeon@kpfis.or.kr)

재정수지

재정수지란 해당 연도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정지표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재정수지에 대한 정보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

인포그래픽

·웹툰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재정건전성 주요지표 > 알기 쉬운 개념설명 > 인포그래픽 > 재정수지의 정의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웹툰 > 통합재정수지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재정건전성 주요지표 > 알기 쉬운 개념설명 > 인포그래픽 > 재정수지의 정의에서는 재정수지에 대한 정의, 추이, 국제비교 등을 인포그래픽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웹툰 > 통합재정수지에서는 통합재정수지를 웹툰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추이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재정건전성 주요지표 > 재정수지 추이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재정건전성 주요지표 > 재정수지 추이에서는 1997년부터 2018년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규모 및 GDP 대비 비중의 연간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각 재정수지별 GDP대비 비중 추이는 꺾은선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규모는 그래프 아래 통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데이터 및 문서 자료

상세재정통계DB > 수지 > 데이터자료 > 재정수지 등 6개의 데이터 자료

상세재정통계DB > 수지 > 문서자료 > 한국통합재정수지

상세재정통계DB에서는 수지와 관련된 데이터 및 문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세재정통계DB > 수지 > 데이터자료에서는 재정수지와 관련된 총수입,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등 총 6개의 데이터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자료 중 '재정수지' 데이터에서는 재정수지에 관한 월별 데이터 및 차트, OPEN API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SHEET를 클릭하면 각 회계연도별 월별 총수입, 총지출, 통합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 수

입,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관리재정수지 정보를 보실 수 있고, CHART 탭에서는 총수입 합계, 총지출 합계,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OPEN API 탭에서는 재정수지 데이터의 ID, 명칭, 설명 등 재정수지와 관련된 OPEN API 데이터의 구성 요소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자료로는 **상세재정통계DB > 수지 > 문서자료 > 한국통합재정수지**에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9건의 문서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illustrates the '열린재정' (Open Budget) portal interface. At the top, a navigation bar includes '분류별' (By Category), '생산기연별' (By Production Year), and '자료출처별' (By Data Source). A sidebar on the left lists various data categories, with '수지' (Balance) highlighted.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table of financial data, including '총수입' (Total Revenue), '국세수입' (Tax Revenue), '세외수입' (Extraordinary Revenue), and '기금수입' (Fund Revenue). Below the table, a '재정수지' (Financial Balance) section is shown, with tabs for 'SHEET', 'CHART', and 'OPEN API'. The 'CHART' tab is selected, displaying a line graph of the '통합재정수지' (Consolidated Budget Balance) from 2010 to 2018. The graph shows a fluctuating trend with a general upward trend in the latter half of the period.

재정수지 (Financial Balance) Table:

NO	기준년도	기준월	총수입 합계(조원)	총지출 합계(조원)	통합재정수지(조원)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조원)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조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조원)	관리재정수지(조원)
1	2020	1	51.2	50.9	0.3	6.8	4.9	2	-1.7
2	2020	2	77.8	104	-26.2	13.9	9.2	4.7	-30.9
3	2020	3	119.5	164.8	-45.3	24.3	14.3	10	-55.3
4	2020	4							

재정수지 (Financial Balance) Chart:

The chart displays the '통합재정수지' (Consolidated Budget Balance) from 2010 to 2018. The Y-axis represents the balance in 100 billion KRW, ranging from -100 to 500. The X-axis represents the year, from 1 to 12. The chart shows a fluctuating trend with a general upward trend in the latter half of the period.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수지 용어설명

메타정보열기

SHEET

CHART

OPEN API

변수명

영세서 다운로드

인증키 신청

요청주소

http://openapi.openfiscaldata.go.kr/BudgetBalance

요청제한 횟수

제한없음

기본인자

변수명	요청인자타입	설명	비고
Key	STRING(필수)	인증키	기본값 : sample key
Type	STRING(필수)	호출 문서(xml, json)	기본값 : XML
plndex	INTEGER(필수)	페이지 위치	기본값 : 1(sample key는 1 고정)
pSize	INTEGER(필수)	페이지 당 요청 숫자	기본값 : 100(sample key는 5 고정)

검색 요청인자

항목명	요청인자타입	설명
OJ_YY	STRING(선택)	기준년도

출력값

샘플URL

Open API 테스트

결과 메시지

No	항목 ID	항목명	설명
1	OJ_YY	기준년도	기준년도
2	OJ_M	기준월	기준월
3	TOT_RV_SUM_AMT	총수입 합계(조원)	총수입 합계
4	TOT_RV_1_AMT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조원)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5	TOT_EP_SUM_AMT	총지출 합계(조원)	총지출 합계

한국통합재정수지

메타정보열기

FILE

총 9건

회계연도

선택

파일명

검색

No	파일명	확장자	사이즈	다운로드
1	2018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pdf	2Mb	78
2	2017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pdf	12Mb	117
3	2016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pdf	12.4Mb	114
4	2015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pdf	12Mb	27
5	2014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pdf	12.4Mb	20
6	2013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pdf	9.3Mb	22
7	2012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pdf	12.3Mb	17
8	2011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pdf	16.5Mb	17

4 재정수지 관련 정부정책 정보

재정수지 관련 보도자료 →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 

재정수지 관련 정부의 정책을 보고 싶은 경우,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에서 '재정수지'를 검색하시면 총 59건의 보도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총 59건

제목	첨부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
[보도참고] 2020.6.7.(일) 매일경제 ?한국 구조적...		재정건전성과	2020-06-07	13
2013년 1~9월 (누계) 중앙정부 재정수지(잠정)		재정관리총괄과	2013-11-29	2
2013년 상반기 중앙정부 재정수지(잠정)		재정관리총괄과	2013-08-30	0
(보도참고) '13년 1/4분기 중앙정부 재정수지		재정관리총괄과	2013-05-31	0
(보도참고자료) 12년 3/4분기(누계) 중앙정부 재...		재정관리총괄과	2012-11-30	0
'12년 상반기 중앙정부 재정수지(잠정)		재정관리총괄과	2012-08-31	0
(보도참고자료) '12년 1/4분기 통합재정수지 결과...		재정관리총괄과	2012-05-29	3
(보도참고자료) 11년 11월(누계) 통합재정수지 잠정...		재정분석팀	2012-01-30	2
(보도참고자료) 11년 10월(누계) 통합재정수지 잠정...		재정분석팀	2011-12-30	3
(보도참고자료) 11년 9월(누계) 통합재정수지 잠정...		재정분석팀	2011-11-25	1
(보도참고자료) 11년 8월(누계) 통합재정수지 잠정...		재정분석팀	2011-10-28	1
(보도참고자료) 11년 7월(누계) 통합재정수지 잠정...		재정분석팀	2011-10-05	1
(보도참고자료) '11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잠정...		재정분석팀	2011-08-26	1
(보도참고자료) '11년 1/4분기 통합재정수지 잠정...		재정분석팀	2011-05-27	1
(보도참고자료) 2010년 재정수지 결산결과		재정분석팀	2011-04-05	1
'10년 11월 통합재정수지 잠정 집계 결과		재정정책과	2011-01-31	1
'10년도 10월말 통합재정수지(잠정,누계)		재정분석과	2010-12-15	1
'10년 6월 통합재정수지(잠정)		재정분석과	2010-08-20	1
10년 5월 통합재정수지(잠정) 보고		재정분석과	2010-07-16	1
10년 4월 통합재정수지(잠정) 집계 결과		재정분석과	2010-06-17	1

⏪ ⏴ 1 2 3 ⏵ ⏩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부동산'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부동산정책', '아파트', '규제' 등도 연관어로 도출되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0)」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의 발표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서는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복지를 지원하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이달의 이슈키워드

부동산



연관어

부동산정책

아파트

규제

투자

투기

세금

임대

토지

전세

대책

분양

다주택자

가격

강남

대상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2020년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 변동률이 지난 5월 0.14%에서 0.41%로 확대되었다. 수도권 변동률은 0.25%에서 0.49%로 상승했으며, 그중 경기도가 가장 높았다(0.4%→0.68%). 전국 주택종합 전세 가격 또한 0.26% 상승하였다. 수도권의 상승폭은 0.35%였는데, 경기도의 전세가격 상승 폭이 0.48%로 가장 높았다.

2020년 지역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단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국	0.28	0.34	0.54	0.27	0.14	0.41
수도권 ¹	0.39	0.51	0.93	0.51	0.25	0.49
지방	0.17	0.18	0.19	0.05	0.03	0.33
5대광역시 ²	0.39	0.32	0.26	0.10	0.06	0.41
8개도 ³	-0.02	0.05	0.06	-0.01	0.00	0.24
세종	1.84	1.99	4.24	1.50	0.32	2.13

자료: 한국감정원(2020), 2020년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의 재구성

정부는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주택시장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고, 서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관리 대책(6.17) 및 보완 대책(7.10)

정부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주택시장 안정과 보완 정책을 발표하였다.

6.17 대책의 주요내용은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등 투기수요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6.17 대책을 보완하는 7.10 대책은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대책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여,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하였다. 민영주택 공공택지의 특별공급 비율은 15%, 민간택지는 7%로 배정하였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하였는데, 공공분양가 6억 이상인 신혼희망타운은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로 확대되었다.

¹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다.

²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을 포함한다.

³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포함한다.

분양가 6억 이상인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기준을 확대 하였다. 아울러, 청년 전월세 자금도 지원하는데, 버팀목전세의 금리 인하로 31.7만 이상 가구의 이자를 연 17만원 경감시킨다. 주거안정·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또한 금리인하를 통해 4천 가구의 이자를 연 6.6만원 줄여줬다. 그 외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등도 포함됐다.

2020년 부동산 관련 주요 사업(2020년 본예산 기준)

정부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생애단계, 소득수준에 맞춰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부동산 관련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다.

2020년도 부동산 관련 주요 사업 예산

(단위: 억원)	
주요 사업	지출액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2,500
주거 급여지원	16,305
주택구입·전세자금	93,992
국민임대주택	8,154
공공임대주택	8,972
행복주택	16,713

자료: 국토교통부(2020), 2020년 사업별 설명자료의 재구성

▶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집주인 임대주택사업(2,500억원)은 집주인에게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을 저리 용자하고, 집주인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적임대를 제공한다. 공적임대 기간은 8년 이상이며, 주택 담보대출 상환금의 저리 용자 조건은 가구당 수도권은 1억원, 광역시는 8천만원, 그 외 지역은 6천만원까지다. 단독주택,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며 2022년까지 2.5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 주거 급여지원

주거 급여지원(1조 6,305억원)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을 지원한다. 대상은 소득인정액⁴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4인 기준, 213.7만원)인 123만 가구이다. 임차료 지원은 지역별·가구원 수별로 산정

된 기준임대료(11.8~50.4만원)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한다.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 따라 보수 범위를 구분하여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데, 대보수의 경우 1,241만원, 중보수 894만원, 경보수 457만원이다.

▶ 주택구입·전세자금

주택구입·전세자금(9조 3,992억원)은 서민의 주택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무주택자에게 주택자금 및 전·월세 자금을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등)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 최초자는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호당 2억원을 지원한다. 이율은 상환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95~2.70%이다. 전세대출(버팀목대출 등)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등은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 보증금의 70%를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이율은 연 2.1~2.7%이다.

▶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8,154억원)사업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저소득층이 저비용으로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2020년 2.1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임대 기간은 30년 이상이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크기에 따라 다른데, 50㎡ 미만의 면적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50~60㎡의 경우 면적은 청약주택에 가입한 동시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60㎡ 초과 면적은 청약저축에 가입했으면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입주 자격이 제공된다.

▶ 행복주택

행복주택(1조 6,713억원)사업은 도심 내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 토지 등 다양한 용지를 활용하여 젊은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거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0년 2.7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주거 취약 계층이 입주 대상이다. 임대료는 사업비, 입주자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는데,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변시세의 60%,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수준이다. 공급 대상 비율은 일반형과 산업단지형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형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에게 80%, 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에게 20%를 공급한다. 산업단지형은 산업단지 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에게 90%, 고령자에게 10%를 배분한다. 거주기간은 대학생·신혼부부 등이 6년, 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는 20년이다.

4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을 의미한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은 정기적으로 연간 2회(4월, 10월)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이하 WEO)를 발표하고,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7월과 차년도 1월에 수정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발표한다. 이번 수정전망은 일정을 앞당겨 6월에 발표했다. 이번호에서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ne 2020」의 주요 내용과 정책 권고 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IMF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Update, June 2020」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2020년 상반기 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 IMF는 이번 수정전망에서 2020년 경제성장률을 -4.9%로 전망했는데, 이는 4월 전망치(-3.0%)보다 1.9%p 낮아진 수치이다. IMF는 2021년 세계경제성장률도 기존 5.8%에서 5.4%로 0.4%p 낮췄다. 이런 하향조정은 상반기에 경기침체가 심해진 데다 하반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 데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국가 봉쇄(Lockdown)가 예상보다 길어짐에 따라 경기회복세 역시 둔화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IMF는 개별국가는 의료서비스 역량과 백신개발을 위한 대응자원을 확대를 권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 봉쇄로 인한 국민소득 감소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경제정책을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다국간 협조를 통해 의료 위기와 자금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 대해 채무 면제, 국제금융 안전망을 통한 대출 등과 같은 유동성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위기: 예상보다 심각한 경제 상황

2020년 4월 세계경제전망보고서 이후 많은 신흥·개도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엄격한 봉쇄정책을 실시했다. 이는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침체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부국가를 제외하고 2020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여전히 경제 위축 가능성이 크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환자 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봉쇄령, 소득의 급감 등과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소비와 서비스의 생산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기업들도 수요 감소, 공급 중단, 불확실한 실적 전망 등에 기초하여 투자를 줄이고 있다.

세계 노동시장은 경제활동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에 의하면, 20년 1분기의 근로시간 총량은 전분기에 비해 약 1억 3,000만명분의 정규직(Full-Time Jobs) 노동시간이 감소하였다. 2020년 2분기의 감소폭은 3억만명 이상의 노동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타격은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일수록 더욱 심각하며, 이 중에서도 저소득층 여성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세계무역은 2020년 1분기에 전년대비 약 3.5% 감소하였는데, 수요 부진과 국제관광의 침체, 봉쇄로 인한 공급 혼란 등이 그 이유이다. 2020년 4월 기준 선진국의 물가상승률은 2019년 대비 1.3%p 하락한 0.4%이고, 신흥국은 1.2%p 하락한 4.2%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선진국의 금융시장은 위축에서 벗어나 완화되는 모습이다. 정도는 낮지만 신흥국에서도 완화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재정·금융 대책의 결과이며, 이에 따라 단기적 손실은 회피할 수 있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근로자의 실업을 막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도산을 막았다. 또한, 주요 중앙은행의 신속한 대책을 통해 유동성 공급 확대와 차입비용의 상승을 억제하였다. 일부 선진국 중앙은행은

자산 매입 프로그램(Asset Purchase Program)을 확대하였고, 신흥국 중앙은행은 양적완화를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 주요은행은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 위해 통화 스왑을 체결하여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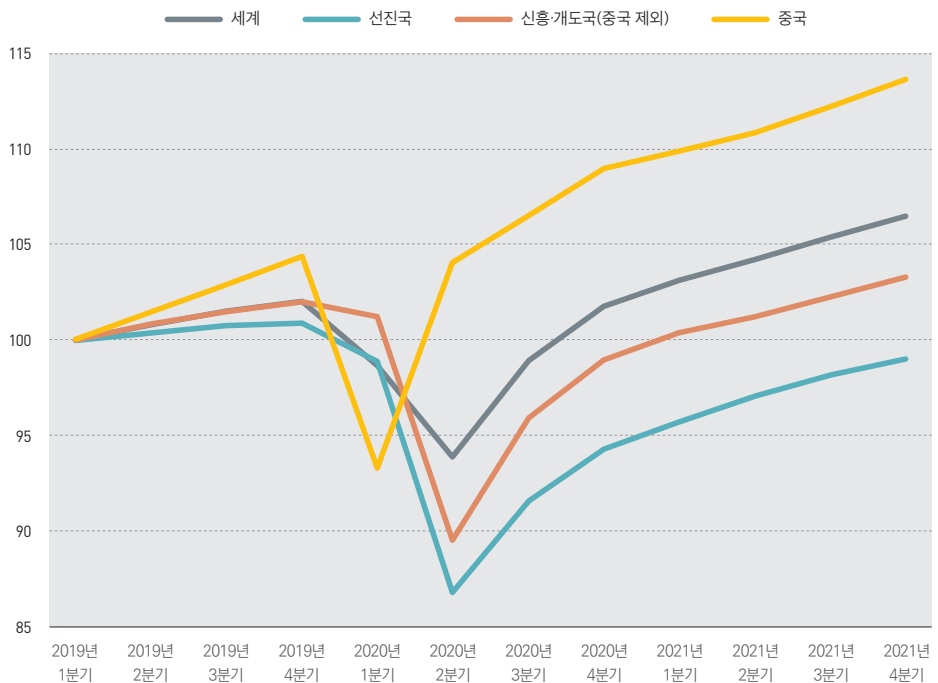
원유시장도 점차 안정되는 추세인데, 지난 4월 이후 크게 떨어졌던 서부텍사스산(West Texas Intermediate, WTI) 원유 선물 가격은 반등세로 돌아섰다. 환율시장에서도 위험 심리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하여 1~4월에 걸쳐 미국, 일본, 유럽의 통화 가치가 상승하였다가, 6월 이후 다시 하락하는 추세이다. 특히, 미국 달러는 1~4월에 걸쳐 실효환율이 8.0% 오른 뒤 6월에는 4.0% 가까이 하락했다. 아울러, 1~4월 급격히 약세를 보였던 통화들은 4월 이후 강세로 전환하였다.

전망: 심각한 경기침체 상태에서 완만한 회복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IMF는 세계경제성장률을 2020년 -4.9%로 예측했다. 경제활동은 2020년 2분기 이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21년 세계경제성장률은 5.4%까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림. 세계 GDP 추이 변화

(단위: %)



주: 2019년 1분기를 100으로 가정

자료: IMF(2020),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ne 2020」



▶ 불확실성

IMF는 이번 세계경제전망에는 다음과 같은 불확실성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봉쇄의 기간
- 지출에 영향을 주는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실직 근로자의 능력
- 팬데믹 종식 후 도산기업 및 실직자로 인한 경제활동 회복의 제한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작업장 안전망 강화로 사업 비용 상승
- 글로벌 공급망(Supply-Chain) 재편(제조업)
- 대·내외적 영향에 따른 국제적 파급효과
- 현 자산 가치와 전망치의 괴리 해소

▶ 선진국

2020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치인 -6.1%에서 -8.0%로 하향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올해 상반기의 국가봉쇄,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경제전반에 예상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2021년 경제성장률은 4.5%에서 4.8%로 상향 전망하였다.

1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에 비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구매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환율을 의미한다.

▶ **신흥·개도국**

신흥·개도국은 국내 경제활동의 제약, 부진한 대외수요 등에 영향을 받아 -3.0%로 전망했다. 이는 4월 예측(-1.0%)보다 2.0%p 떨어진 것이다. 2021년에는 중국의 회복 전망(8.5%)을 반영하여 5.9%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4월 전망 대비 0.7%p 낮은 수준이다. 중국을 제외한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5.0%, 2021년 4.7%로 전망했다. 이는 중국과 다른 신흥·개도국의 팬데믹 양상이나 회복세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 **경제전망 리스크**

현 상황을 감안해볼 때, 이번 경제전망은 상·하방 양쪽으로 리스크가 큰편이다. 상방으로는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 가능성과 추가 지원 정책으로 인한 빠르게 회복하는 경우이다. 하방 리스크의 요소로는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인한 국가간 이동, 지출, 금융 여건의 긴축 등의 제약이 꼽혔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위험 외에도 미-중간 긴장 고조, 석유수출국 기구(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 + 국가 간 갈등, 사회적 불안 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책 권고 사항▶ **의료시스템을 위한 적절한 자원의 확보**

모든 국가에서 바이러스 항체검사, 감염경로 추적·격리·개인보호 장비 확보, 의료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또한, 다국적 협조를 통해 의료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해야한다. 국제기구 등을 통해 충분한 백신 공급을 위한 재정지원도 고려해야한다.

▶ **경기대응과 회복촉진책**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의 감염가능성에 직면한 국가들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국가 봉쇄 등으로 억제하고 있다. 이동제한의 여파로 경기침체는 더욱 심화되었고, 대규모의 취약자들(기업 및 고용)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제활동이 재개될 경우 정책중심을 기존의 취약자에서 경기회복 촉진 및 노동 재분배로 옮길 필요가 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침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정책입안자들은 경기침체 시에 시의 적절하고 일시적인 자동안정화장치 강화를 통해 경제회복력을 향상시켜야한다. 거시경제 환경의 악화에 대응하는 규칙기반 재정부양책(Rules-Based Fiscal Stimulus)이 경기침체를 완화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정책입안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영향을 받는 가구 및 기업을 지원하는 경기부양책, 통화, 금융정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더 심해지는 국가는 확산을 늦추기 위한 봉쇄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봉쇄와 보건충격(Health Shock)으로 인한 경제 활동의 위축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봉쇄 해제 후에는 경제활동이 신속하게 정상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조치와 재교육 확대,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국가는 피해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는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정책지원을 통해, 특정 부분(Being Targeted)에 집중됐던 자원을 좀더 보편적인 부분(Being More Broad-Based)으로 재분배해야 한다. 국가가 재정 여력이 있는 경우,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투자자와 사회 안전망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고용지원금이나 노동자 교육 훈련에 대한 지출을 늘려 팬데믹 이후 근로 수요증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입안자들은 고용을 저하하는 요인에 대처해야 된다. 특히, 과도한 부채에 대한 재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다자간 협력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각 국가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의료시스템 지원을 위한 공통의 대책을 마련하고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국가를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

저소득 국가와 개도국에 채무면제, 채무상환의 일시정지 등을 통해 국제 유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흥·개도국은 중앙은행 스왑, 국제 금융안전망 등을 통해 국제 유동성을 늘려야 한다. 더 나아가, 정책입안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머무르지 않고 무역 및 기술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자간 교역시스템(Multilateral Rules-Based Trading System)을 통해 협력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줄어든 온실가스의 현 수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국의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탄소세²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확대·재편할 필요가 있다.



²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방송미디어 산업은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생태계로 빠르게 진화 중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미디어 콘텐츠 분야를 활성화시켜 직업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두 사무관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자.

담당. 김상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gkim@kpfis.or.kr) 글. 정재림 일러스트. 강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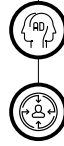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 인터뷰로 진행하였습니다.



Interview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

이영석
사무관



청년 일자리를 이끌어가는 방송미디어 전문인력 양성 교육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방송미디어 분야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는 어떤 교육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까? 미래방송인을 꿈꾼다면 당장 '방송미디어 직업 체험전'(8월)과 '방송미디어 산업체 현장교육'(10월)을 눈여겨보자.

변화하는 방송미디어 콘텐츠

초연결 시대에 미래 방송인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미디어 분야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방송계에 종사하고 있는 현업인을 대상으로 방송미디어 직군에 대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방송미디어 업계로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송미디어 예비인력 원스톱 양성교육'도 실시한다. "방송미디어 산업은 다양한 플랫폼과 네트워크, 디바이스와 융합하면서 새로운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이 단순히 TV 시청에 그쳤다면, 지금은 네트워크와 IP가 융합해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석 사무관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5G, 빅데이터 기술과 융합하며 주변 환경과 상호 연동되는 실감·지능·융합형 방송미디어로 진화해나가고 있다.

"미디어는 개인 중심(1인 가구, 모바일 시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직접 동영상을 제작하는 능동적인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1인 미디어와 10분 이내의 짧은 영상 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지요."

방송미디어 산업은 신기술과 신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작 주체를 생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의적인 콘텐츠 요소가 타 산업과 만나 새로운 직업군 생성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인력이 변화된 기술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다.

미래 방송인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오는 8월 27~28일에는 미래 방송인을 꿈꾸는 방송미디어 예비인력에게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직업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 '제7회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이하 직업체험전)이 개최된다. 7회째를 맞는 직업체험전은 방송미디어 산업 분야에 관심은 많지만, 현업 방송인과 교류 기회가 적고, 관련 정보가 부족한 이들을 위해 시작되었다.

방송미디어 직군을 꿈꾸는 미래 방송인의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직업체험전에는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을 1:1로 만나 진행되는 진로·직업 상담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PD, 방송 기자, 방송 작가, 후반 작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 촬영 감독, 특수 분장 등 25개 방송 직군 및 5개 미디어 관련 학과에 대한 진로·직업 상담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 채널에 배포·상영한다.

“또한, 참가자들이 방송·미디어 분야에 대한 개별(팀) 역량을 겨루는 6개 분야의 콘테스트도 열립니다.”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콘테스트는 ▲ PD ‘창의 콘텐츠 발굴 대회’, ▲ 성우 ‘Magic Voice’, ▲ 연기자 ‘나도 배우다’, ▲ 아나운서 ‘아나테이너’, ▲ 기자 ‘이슈를 잡아라’, ▲ 영상디자이너 ‘영(Young)상 메이커’ 등 6개 분야로 이루어진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참가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좋은 작품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교육과 멘토링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더불어 10월 이후에 진행되는 ‘제5회 방송미디어 산업체 현장교육 지원 사업’(이하 산업체 현장교육)도 눈여겨볼 만하다. 산업체 현장교육에서는 방송 미디어 분야 취업 희망자들이 교실 안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다. 방송 현장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산업체의 제작 실무에 참여하는 현장 중심 실무교육인 것이다.

“산업체 현장교육은 예비인력에게 방송미디어 제작, 서비스 기술 등 전 분야에 대한 실무 중심의 취

업역량 강화교육을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는 방송·미디어 산업체에는 신진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5회 산업체 현장교육은 지원 기간을 기존 2주에서 1개월로 확대하고 차년도부터는 학점연계 인턴십 형태로 개편할 계획이다.

선순환이 가능한 인력양성의 생태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지원 사업을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경험과 창의성, 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업인은 예비인력에게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예비인력은 방송미디어 기업에 실무형 고급인재로 적기에 공급되어 현업인과 예비인력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업인에게는 방송미디어 신기술을 글로벌 수준에 맞도록 교육하여 국내 미디어 산업에 경쟁력을 높이고, 예비인력에게는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가 되기 위한 예비인력 원스톱 양성과

정, 글로벌 공동프로젝트 등 추가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이영석 사무관은 앞으로 5G 실감·융합 미디어 상용화, 국내·외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 등이 성장하면서 방송미디어 분야 신규 청년 일자리의 기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기업에서는 채용 즉시 업무에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선호하지만, 특성화고와 대학 등 기존 교육기관의 교육은 현업에 즉시 투입되어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영석 사무관은 방송현업인과 예비인력이 함께 갈 수 있는 선순환이 가능한 인력양성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방송미디어 산업은
다양한 플랫폼과
네트워크, 디바이스와
융합하면서
새로운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창작 전 주기를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활성화 사업

1인 미디어란, 인터넷 동영상·SNS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개인이 이용자의 취향에 맞춘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개념 미디어다.
‘1인 창작자 공모전’, ‘1인 미디어산업 활성화 방안’에 이어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기획 중인 방연진 사무관을 만났다.

Interview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

방 연 진

사무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1인 미디어

우리나라에서 1인 미디어가 ‘산업’으로 형성된 것은 불과 2015년쯤이다.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지만, 1인 가구의 증가와 5G 상용화,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OTT 서비스(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그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 이제 전통 미디어와도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초를 기준으로 국내에 약 3,200여명의 1인 미디어 창작자가 MCN(다중채널 네트워크) 사에 가입하여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1인 미디어는 남녀노소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1인 창작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 미디어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업 성공사례와 MCN이라는 새로운 사업도 등장하고 있어 새로운 일자리로 부각되고 있지요.”

디지털방송정책과 방연진 사무관은 1인 미디어 산업기반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 세계 최초로 개통한 5G 기술을 통해 고용량, 고화질의 영상도 스마트폰을 통해 송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5G 망을 기반으로 장소에 제약 없이 야외에서도 1인 미디어의 실시간 방송이 가능해졌고, 어디서나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와 원활하게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지요.”

1인 미디어 산업은 개인의 취미에서 벗어나 산업화로 나아가고 있다. 커머스·마케팅, IP 비즈니스, 교육 등 사업을 다각화하여 타 산업과 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판매자가 소비자와 실시간 영상으로 소통하며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라이브 쇼핑 플랫폼, 교사와 크리에이터들이 미술이나 중국어 등 분야별 교육 영상을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브랜드화한 상품 판매 등 융합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업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이끌어낸 1인 미디어 시장 규모는 2018년 3조 8,700억원이며, 2023년에는 8조원¹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글로벌 미디어 신산업을 위한 지원 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인 미디어 분야의 잠재력을 예견하여 2014년도부터 1인 미디어 육성 정책을 추진해왔다. 잠재력 있는 1인 창작자를 발굴하고 전문교육과 멘토링을 실시하여 콘텐츠 제작 지원 후 평가를 통해 시상하는 등 ‘1인 창작자 공모전’을 개최했고, MCN 사의 우수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크라우드 펀딩과 연계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도 지원했다.

“그동안 1인 미디어 창작자 공모전과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통해 1인 미디어 분야의 활성화를 추진해왔지만, 창작자의 성장 초기 단계에서 단발성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



¹ 미디어미래연구소(2019.5.)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2019년 8월에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창작자 발굴부터 콘텐츠 제작 지원, 산업화 및 유통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지원에 이르기까지 지원정책을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한 것이죠.”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은 1인 가구 증가와 모바일 기반 콘텐츠 소비 및 유통 확산에 따라 글로벌 미디어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 내용은 성장기반 조성, 산업 생태계 강화, 1인 미디어 저변 확대 총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성장기반 조성은 1인 창작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내용이다. 전국적으로 전문교육을 진행하여 수익화 방안, 법률·조세 문제 등을 멘토링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공간을 무료 개방하는 한편 바우처를 통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1인 미디어 창작자와 관련 기업을 비즈니스 매칭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산업화와 유통을 지원한다. 또한, 국제 공동제작 지원을 확대해 동남아와 북미 지역까지 창작자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1인 미디어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민·관 합동 ‘1인 미디어 대전’을 개최하고 건강한 콘텐츠 문화 캠페인과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1인 미디어 분야의 진입장벽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전업으로 활동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경

험과 노하우 그리고 자본이 부족한 초기 진입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커가는 건강한 산업

1인 미디어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일까. 방연진 사무관은 1인 창작자와 관련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교류할 수 있는 협업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1인 미디어 지원정책과 관련된 간담회와 세미나 등에서 타 창작자들과 교류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계획 중입니다. ‘1인 미디어 콤플렉스’는 사무공간과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창작자와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한편, 1인 미디어 분야에 대해 유해 콘텐츠 유통, 세금 탈루, 과대광고 등의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인식개선과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면 클린 콘텐츠 캠페인과 세무·저작권 등의 교육으로 건전한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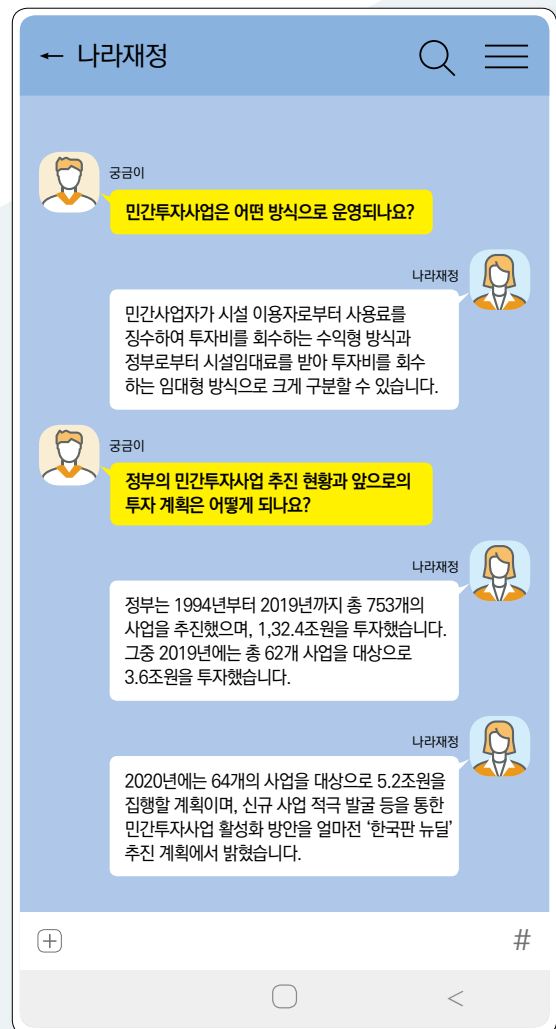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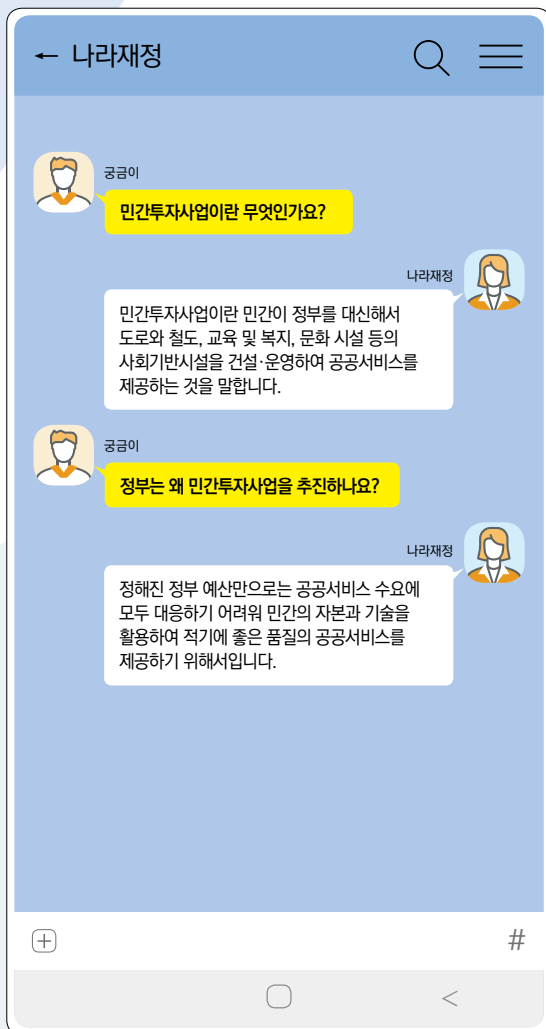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개성 있고 창의적인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되기를 꿈꾸는 이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꿈이 실현되기까지 1인 미디어 시장의 초석을 잘 다지는 일이 담당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연진 사무관은 정책의 고객인 1인 미디어 창작자와 관련 기업의 의견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시장 환경 변화를 파악하며 1인 미디어 분야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창작자들이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민간투자사업이 무엇인가요?

조현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hyunheecho@kpfis.or.kr)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방향의 하나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재정 투자를 마중물로 후속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발굴·유도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충을 목적으로, 총 30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호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이 무엇이며, 정부가 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근길마다 지나는 도로와 지하철 노선,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학교와 도서관, 문화 시설 등 일상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위한 기반시설은 모두 정부가 직접 건설·운영하는 것일까요? 정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점점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모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경영 노하우를 통하여 사회기반시설¹을 확충하며, 이때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동법 제4조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크게 수익형 민간투자사업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 성격	민간사업자가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민간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시설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투자비 회수	이용자의 사용료	정부의 시설임대료
주요 시설	도로, 철도, 항만 등	교육, 복지, 문화, 의료시설, 환경시설 등
추진 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 ¹⁾ , BOT(Build-Operate-Transfer), BOO(Build-Own-Operate) 등	BTL(Build-Transfer-Lease) ²⁾

주 1)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인 민간이 일정 기간 시설을 운영하여 '사용료 징수'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

2)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BTO 방식과 동일하지만, 그 시설을 정부로부터 임차하여 '정부지급금(임대료, 운영비)'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점에서 다름

정부는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총 753개의 사업에 132.4조원을 투자했습니다. 그중 2019년에는 총 62개 사업에 3.6조원을 투자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BTO 방식으로 도로, 철도, 항만 35개 사업에 2.5조원을 투자했으며, BTL 방식으로 철도, 국방, 환경 등 27개 사업에 1.1조원을 투자하였습니다². 그리고 2020년에는 64개 사업에 5.2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³.

올해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30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등을 통해 2023년부터 매년 1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신규 사업 발굴,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⁴.

¹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을 의미한다.

² 기획재정부, 2019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2020.5.)

³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2020.2.)

⁴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20.7.)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인간자본으로서의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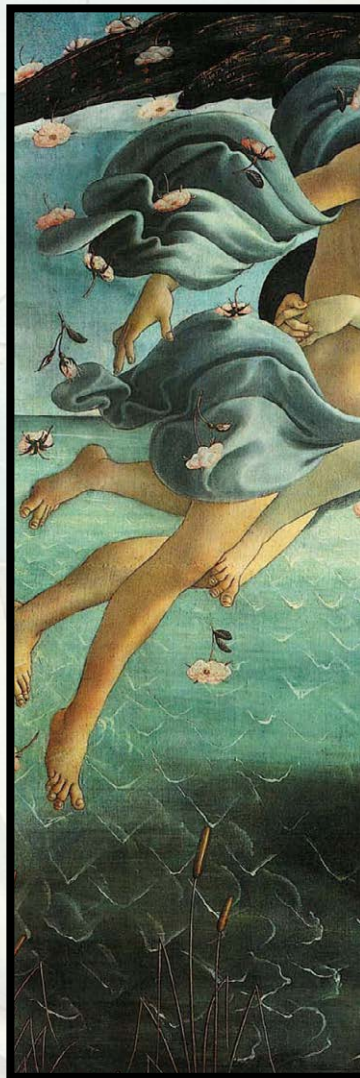
글 최병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경제학자의 미술관』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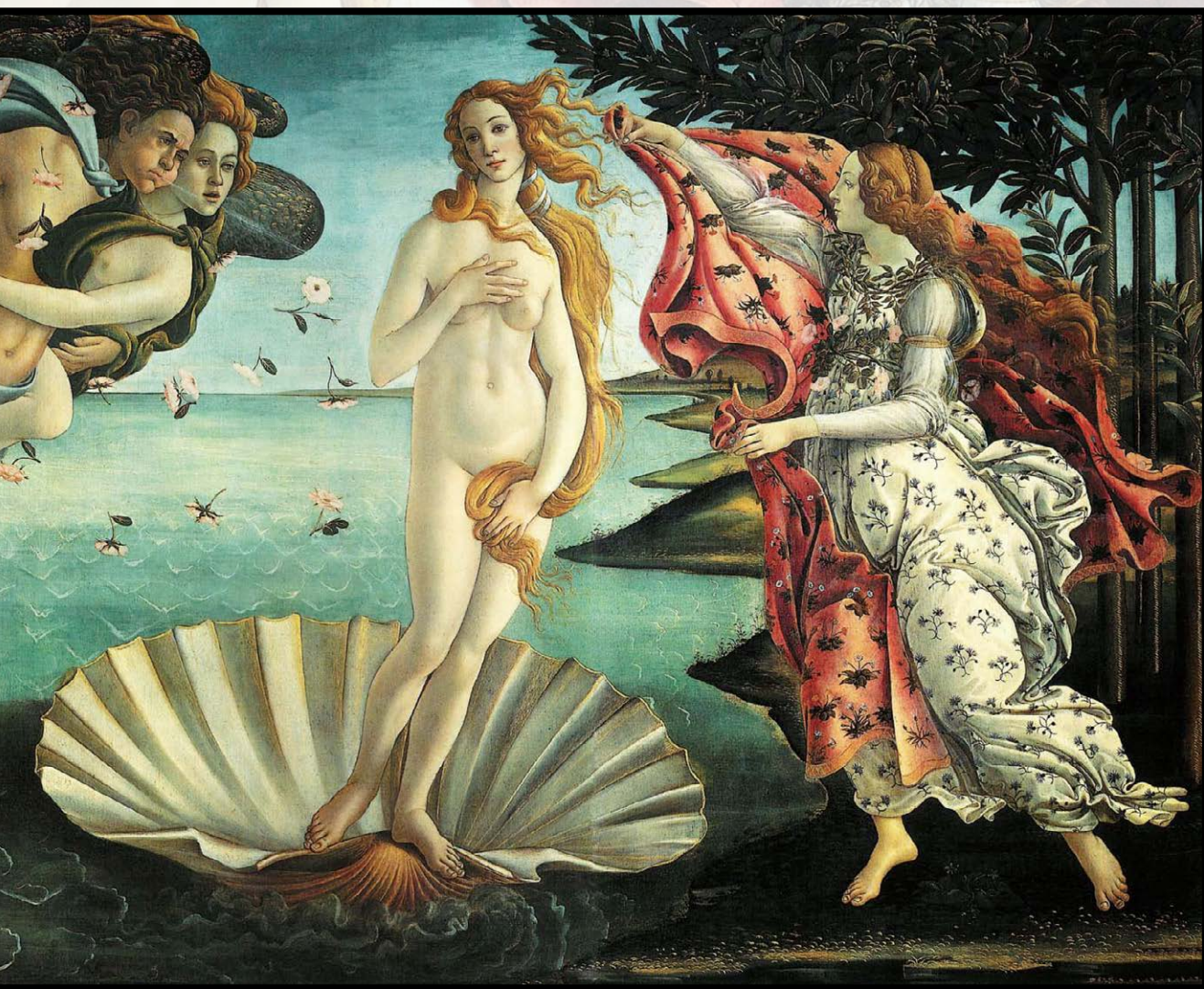


서양 회화의 단골 모델 중 하나로 단연 미의 여신 비너스를 꼽는데 누구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비너스는 로마신화에서 불리는 이름이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다. 비너스를 그린 작품으로는 산드로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 1444~1510)가 1485년경에 그린 <비너스의 탄생(The Birth of Venus)>이 가장 유명할 것이다.

보티첼리가 활동하던 당시의 피렌체는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다. 당시 이탈리아의 피렌체나 베네치아 같은 도시국가들은 상업과 무역이 번성하여 도시가 번창하고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부유한 계층의 시민계급이 형성되었다. 또한 이들은 왕족과 귀족계층을 대체하는 문화 소비 계층으로 성장하였다.

피렌체 곳곳을 둘러보면 유서 깊은 건물 앞에는 어김없이 6개의 구슬이 육각형 모양을 이루는 문장(紋章)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 문장은 당시 피렌체에서 가장 부를 많이 축적했던 메디치(Medici) 가문의 문장이다. 메디치 가문은 의약품업과 무역, 그리고 금융업으로 막대한 부를 형성했는데, 축적된 부를 문화나 예술 분야에 투자하여 피렌체의 르네상스 시대를 꽃피우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당시 피렌체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예술가들은 메디치 가문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으며,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역시 이 가문의 후원에 힘입은 바가 컸다.





Sandro Botticelli, <The Birth of Venus>, 1485ca, Tempera on Canvas, 180 x 280 cm, Galleria degli Uffizi, Firenze

피렌체의 중심에는 고딕 양식의 성당 두오모(Duomo)가 있다. 이 두오모는 성모 마리아의 꽃 성당(Santa Maria del Fiore)이 정식 명칭인데, <냉정과 열정 사이(Between Calm And Passion)>라는 영화로 우리에게 친숙하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봐야 할 우피치 미술관(Galleria degli Uffizi)이 있다. 이 미술관은 르네상스 미술의 총체적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을 만날 수 있다. 우피치 미술관의 도록을 보면 표지를 장식한 그림 역시 이 작품이니, 우피치의 수많은 르네상스 회화 중에서도 으뜸으로 간주되는 작품인 셈이다.

<비너스의 탄생> 역시 메디치 가문의 주문에 의한 것이다. 보티첼리는 또한 메디치가의 후원으로 시스티나 성당의 프레스코화를 그리기도 했다. <비너스의 탄생>은 보티첼리의 풍부한 상상력과 시적인 분위기를 더하여 멋진 걸작으로 '탄생'했다. 이 그림은 비너스 탄생의 신화 이야기가 바탕이 된 작품이다. 시간의 신 크로노스가 아버지인 하늘의 신 우라노스의 생식기를 낚으로 잘라 바다에 던져버리자, 그곳에서 거품이 일며 비너스가 탄생했다고 한다. 사랑과 미의 여신의 탄생 이야기로는 좀 기이하다.

이 그림에는 바다의 물거품에서 태어난 비너스가 조개껍질 위에 서 있다. 왼쪽에는 바람의 신이 입으로 바람을 불고 있고, 그 바람에 밀려서 해안가에 닿은 비너스에게 계절의 여신이 옷을 입혀주고 있다. 그런데 비너스와 바람의 신, 그리고 계절의 여신이 거의 같은 거리에 위치한 듯 그려졌다. 보티첼리는 르네상스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원근법 같은 기법에는 아직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다.

이 작품은 또한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진 최초의 누드화이다. 이때까지는 그리는 대상이 여신이라고 할지라도 누드로 그릴 수 없었는데 보티첼리의 이 작품은 비록 여신의 모습이라고는 하나 여인의 아름다운 누드를 사실적으로 그림으로써 당시로서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품이다. 이때부터 비로소 화가들은 중세시대의 기독교적인 종교화에서 벗어나 인간의 실제 모습과 인간의 아름다운 육체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에 누드화의 등장은 육체를 죄악으로 여겼던 중세의 도덕관이 비로소 깨지기 시작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비너스는 '시모네타 베스푸치'라는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녀는 피렌체를 대표하는 미인으로서 메디치 가문의 한 사람이었던 줄리아노의 정부(情婦)였다고 한다.

아름다움이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며,
시대적 배경과 지역적 환경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볼 때 아름다움도 하나의 자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아름다움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실 아름다움이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며, 시대적 배경과 지역적 환경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볼 때 아름다움도 하나의 자본이라는 것이다. 경제학의 이론 가운데 게리 베커(Gary Becker)와 제이콥 민서(Jacob Mincer) 교수에 의해서 60년대에 정립된 인간자본(Human Capital) 이론이 있다. 인간자본이란 인간 자신에 대한 투자로 형성되며, 투자에 의해서 인간 내부에 '축적된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교육은 인간자본 축적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노동시장에서 높은 임금은 더 많이 축적된 인간자본에 대한 사용료(Rent)라고 본다. 인간자본 중에는 교육과 같이 투자를 통해서 증가되거나 향상될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 어떤 인간자본은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런 인간자본은 보통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을 본원적(Intrinsic) 인간자본이라고 부른다. 지능의 경우가 이런 예이다.

그러면 인간의 외모(Appearances)의 경우는 어떤가? 인간자본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외모도 일종의 본원적 인간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성형수술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좋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이런 투자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좋은 외모를 가진 사람은 이미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본원적 인간자본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된다.

실제로 좋은 외모와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나 봉급 수준과 유의한 수준의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밝혀졌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취업을 앞둔 사람들이 성형수술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현상에서도 볼 수 있듯, 현실 세계에서 경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 외모나 용모란 고용주들이 구직자들의 '보이지 않는' 생산성을 가늠할 때 확실하게 의존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시그널(Signal)'인 셈이다. 강남의 수많은 성형외과를 찾는 젊은이들 모습을 보면 웬지 씹쓸해진다.



Amartya Kumar Sen

아마르티아 센의
경제사상:
빈곤의 경제학의 선구자

글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빈자의 곁을 지키는 경제학의 ‘테레사 수녀’

현재 하버드 대학교수인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1933)은 빈곤의 경제학을 개발한 인물이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99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가정에서 자란 그가 하필이면 빈곤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다짐한 계기는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나이에 겪었던 두 가지 아주 참혹한 사건에 대한 생생한 기억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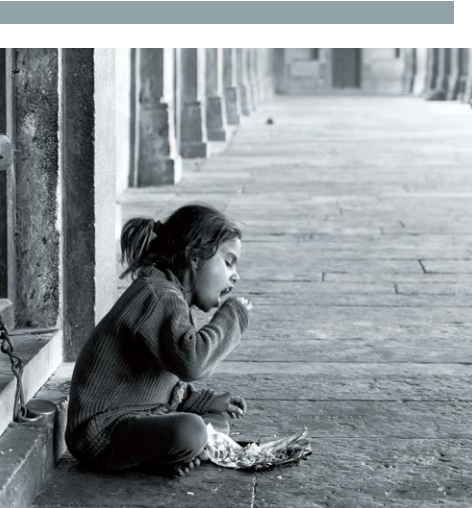
하나는 무슬림 출신 노동자의 애달픈 죽음이다. 센은 힌두교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힌두교도의 칼에 찔려 자신의 집으로 피신한 사람이 애처롭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경험을 했다. 다른 하나는 벵갈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굶주려 힘없이 쓰러져 죽어가는 처참한 광경도 목격했다. 이는 1943년 기근으로 무려 300만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참사였다. 이러한 뼈저린 경험으로 가난에 대한 동정심이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다.

센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본격적으로 빈곤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빈곤의 경제학’이라는 신천지를 선구적으로 개척했다. 이것이 그가 노벨경제학상이라는 영광을 얻은 배경이 되었다. 일생 동안 어려운 사람들 곁에서 이들을 돌봤던 테레사 수녀처럼 센도 빈곤의 경제학을 통해서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를 ‘경제학의 테레사 수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센의 학문적·정서적 동정심의 적절한 상징적 표현이다.

빈곤은 공급의 부족이 아닌 분배의 왜곡 탓

흥미로운 것은 빈곤에 대한 그의 사상이다. 그는 빈곤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상이하게 생각하는 두 진영과 싸우면서 빈곤 철학을 개발했다. 한편으로 국유화를 통해서 빈곤을 없애고 번영을 달성하려고 했던 마르크스주의와 싸웠다. 그는 사유재산의 철폐로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치명적인 폭정을 부른다는 이유로 마르크스를 호되게 비판했다. 일할 자유, 생산과 소비 선택의 자유를 유린한다는 이유로 분배 평등의 사회주의도 강력하게 부정한다.





센을 ‘경제학의 테레사 수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센의 학문적 정서적 동정심의 적절한 상징적 표현이다.

다른 한편, 센은 서민층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유 자본주의와도 싸워야 했다. 자본주의에서 굶주림, 빈곤은 생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분배의 탓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시장의 기초가 되는 자유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시장은 부의 증가를 촉진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생산된 것을 정부가 개입하여 제대로 분배하지 않으면 굶주림, 빈곤, 질병, 교육·의료시설 접근의 어려움 등,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고했다. 그가 어렸을 때 겪었던 병갈의 처참한 기근도 식량공급의 부족보다는 공급된 것을 제대로 나누지 못해서 야기되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분배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빈곤문제 해법은 정치적 자유

센은 재분배를 통한 빈곤과 불평등 퇴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굶주림과 가난으로부터 해방될 권리, 질병을 치료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사회적 기본권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런 권리의 확립을 통해서만 국가는 빈곤층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통하여 실업자를 보호하고 교육과 건강 같은 ‘사회적 재화’를 공급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센은 빈곤과 기아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 민주주의라고 믿는다. 방글라데시나 50년대의 중국, 아프리카의 대규모 기아사태는 민주주의의 부재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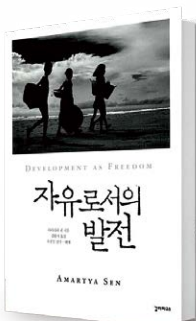
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는 이런 주제로 정치적 자유보다 권위주의 정부가 신속한 경제발전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던 싱가포르의 리관유(Lee Kuan Yew) 전 총리와 뜨거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거대 담론은 흥미롭게도 경제발전은 정치체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과 경제 자유의 산물이라는 인식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발전된 국가에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시장경제의 발달 때문이었다는 것이 뚜렷하게 밝혀졌다. 인도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이지만 거대한 빈곤층의 존재를 극복하지 못한 이유도 자본주의 발전이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여전히 불평등하다〉

글쓴이 아마르티아 센
옮긴이 정미나
출판사 21세기북스



〈자유로서의 발전〉

글쓴이 아마르티아 센
옮긴이 김원기
출판사 갈라파고스

유엔의 인간개발지수는 센의 작품

센은 자신의 경제 사상을 알리는데 매우 수줍어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 인도 이외의 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의 사상적 업적은 매우 크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토론토 대학, 도쿄 대학, 독일의 쾰 대학 등, 세계의 90여 개 대학으로부터 받은 명예박사 학위이다. ‘빈곤과 기아 그리고 불공정의 원인에 관한 뛰어난 인식’으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인도주의 메달상’을 하기도 했다.

센은 여러 가지 다양한 국제적인 구호단체를 이끌면서 빈곤 퇴치에 앞장서서 부유한 나라들은 국제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하여 제3세계의 빈곤과 국제적 불평등을 퇴치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를 통해 제3세계의 빈곤 해결을 위한 유엔의 노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센은 각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그리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유엔과 세계은행의 ‘인간개발지수’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가 작성한 인간개발지수는 국민소득에다가 조기사망률, 기대수명, 문맹, 의료 혜택, 교육, 영양상태 등 이런저런 항목을 더하고 빼거나 또는 각 항목에 특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그는 지수 개발로 모든 나라의 분배와 복지정책에 직간접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지수는 유감스럽게도 다양한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경제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

돈 이야기 - 우리 아이 첫 경제 책

01

지은이

마틴 젠킨스(글)
기타무라 사토시(그림)

- 마틴 젠킨스는 보전생물학자로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 모니터센터에서 10년간 근무하며 환경보호에 관한 글을 썼다. 출판사에서 멸종 위기 동물 시리즈의 자문을 담당하기도 했으며 다양한 어린이 정보책을 출간하고 있다.

옮긴이 고정아 출판사 제제의숲

발간일 2020년 7월 13일

66

돈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돈'.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들려주는 돈에 대한 모든 것을 책 속에 담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돈과 경제에 대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작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나이에 돈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돈의 개념과 경제관념이 바로 잡혀야 올바른 경제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법. 이 책은 아이에게 돈과 경제에 대한 개념을 눈뜨게 하는 첫 번째 책이다. 세상에 아직 돈이 없던 옛날이야기부터 돈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또 오늘날 다양한 돈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인류와 함께 발전해 온 돈의 역사를 다양한 예시와 흥미로운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최초의 은행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왜 물가가 오르는지 등 기본적인 경제 개념도 예시와 그림으로 풀어냈다. 인플레이션, बैं크 런과 같은 어려운 경제 개념의 용어와 헝가리 하이퍼 인플레이션 사태와 같은 세계 경제사의 주요 사건들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책의 끝부분에서는 책 속에 나왔던 경제 용어들에 대한 낱말 풀이를 실어서 명확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 | | |
|----------------------------------|----------------------|
| 1장 세상에 돈이 없던 시절 | 2장 돈은 없지만 물건이 많이 생기자 |
| 3장 셴이 시작되다 | 4장 염소로 물물 교환을 하는 경우 |
| 5장 금속이 등장하다 | 6장 남의 코를 깨문 대가는? |
| 7장 이자가 생겨나다 | 8장 문자의 뿌리가 돈이라고? |
| 9장 동전이 탄생하다 | 10장 돈만큼 오래된 세금의 역사 |
| 11장 고대 로마에서 인플레이션이 태어나다 | |
| 12장 귀금속의 약탈이 에스파냐에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다 | |
| 13장 금에 대한 재미난 사실 | |
| 14장 동전이 (잠시) 퇴장하고, 종이가 들어오다 | |
| 15장 연기처럼 사라지는 돈 | |
| 16장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아도 여전히 종잡을 수 없는 돈 | |

세상의 모든 돈이 사라진다면

- 게임머니부터 블록체인까지 전자화폐가 바꿀 미래

02

지은이

복대원, 윤정구

- 저자 복대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전문직으로 재직 중이며 청소년의 꿈을 지원하는 장학 재단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자 윤정구는 정보화 현장 자문위원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을 고민하고 이를 학교 선생님들과 나누고 있다.

출판사 다른

발간일 2020년 5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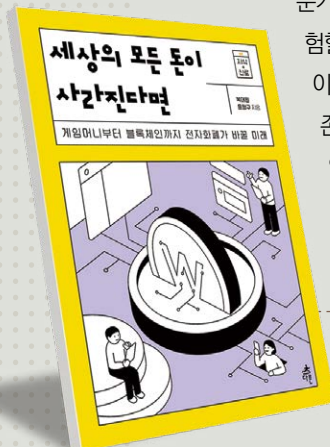
KPFIS's
library

66

전자화폐는 어떤 미래를 만들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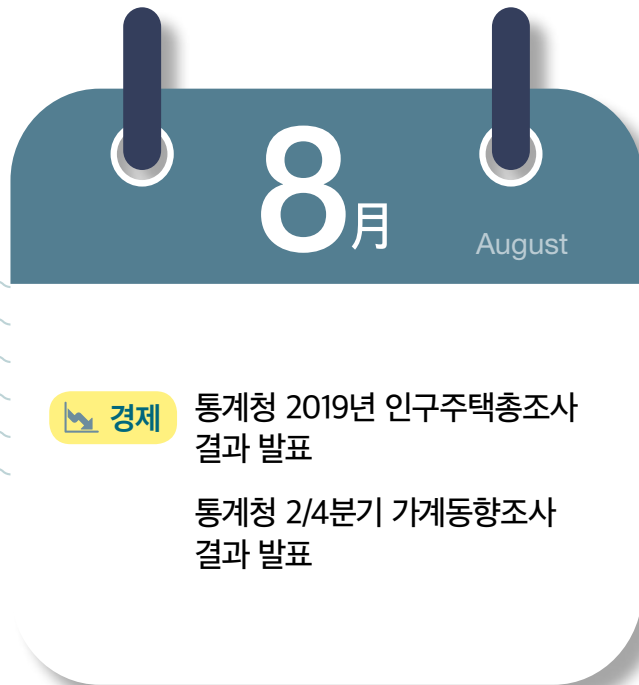
세상에 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전자화폐로 대두되는 새로운 화폐는 세상을 바꾸고 있다. 특히 우리를 둘러싼 금융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 책은 다양한 지식을 제공해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돕는 [지식 더하기 진로] 시리즈의 4 권이다. 4권에서는 화폐의 발달 과정과 원리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발전한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알아본다. 화폐의 모습은 시대의 필요에 따라 바뀌어 왔는데 물물교환으로 시작한 경제활동이 물품화폐, 금속화폐, 종이화폐로 발전되어 왔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화폐가 일상이 되었다. 버스를 타거나 물건을 사고파는 모든 경제활동이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해졌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기존 화폐 체계의 반대에서 있는 암호화폐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무엇이 다르고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를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차근차근 설명한다. 또 암호화폐를 움직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원리와 적용 분야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하게 응용 가능해 이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독자는 핀테크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암호화폐 전문가, 블록체인 개발자, 사물인터넷 개발자 등 앞으로 경험할 미래 사회 직업을 엿보고 진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식 더하기 진로 시리즈는 <펭귄이 날개로 날 수 있다면 - 생존의 기술부터 놀라운 진화까지 날개로 읽는 생물학>, <동물원에 동물이 없다면 - 동물 복지부터 생물 다양성까지 공존을 꿈꾸는 동물원>, <내가 유전자를 고를 수 있다면 - 인간 복제부터 연명 의료까지 생로병사로 읽는 인체의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펴내고 있다.



- 1장 지갑 없이 거래하는 세상
- 2장 오프라인으로 나온 전자화폐
- 3장 국경도 국적도 없는 화폐
- 4장 화폐 없는 사회의 빛과 그림자

Financial Calendar



January 01

- 재정**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경제** 통계청 2019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
- 국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February 02

- 재정** 2019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2019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경제** 통계청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 발표

March 03

- 재정**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각 중앙관서)
- 경제** 한국은행 2019년 4/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July 07

August 08

- 경제** 통계청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
통계청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September 09

- 재정** 2021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2021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 경제** 한국은행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2020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정부, 7.14.)

- 정부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을 선언하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의 도약을 추진
- 튼튼한 고용 안전망과 사람 투자를 기반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하며 2025년까지 총 160조원(국비 114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 발표

□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정부, 7.22.)

-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 지원 및 포용·상생·공정 기반 뒷받침을 위해 ①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 활력 제고, ②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③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총 16개의 법률(내국세 14개, 관세 2개)을 개정

□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OECD, 8.11.)

- OECD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방역·위기 대응 및 경제 성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판 뉴딜」을 소개하며 향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
-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신속·효과적인 방역조치로 코로나19를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 ② 적극적 위기대응 정책으로 성공적인 경제 운영 ③ OECD 회원국 중 최초로 2020년 성장률 전망 상향조정(-1.2% → -0.8%)
- ④ 양호한 재정건전성 바탕의 확장재정 등 거시정책 긍정 평가

April

04

- 재정** 2019년 결산감사 의뢰 (기획재정부→감사원)
- 국제**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May

05

- 재정** 2021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2019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 2019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2019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경제** 통계청 2019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 발표
- 통계청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June

06

- 경제** 한국은행 1/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국제**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발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October

10

- 재정** 국유재산·물품 결산지침 확정
- 국제**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November

11

- 재정** 2021년 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 경제** 통계청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국제**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발표

December

12

- 재정** 2021년 예산 확정
- 경제**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한국은행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한국재정정보원 7월부터 대전, 광주, 대구에 e나라도움 지역 사용자를 위한 권역별 지역사무소 개소

한국재정정보원 지난 1일 대전 지역사무소를 개소하고 6일부터 대전 보조사업자 신청교부 실습교육을 시작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이용자에게 지역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업무 전 과정 전산화를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했으나, 지역 농어민, 소상공인 등 전산 업무를 어려워하는 사용자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실습교육 등 지역 사용자들의 지원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은 2020년 7월부터 대전(7.1.), 광주(7.17.), 대구(7.30.) 총 3개 권역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하고 상설교육장 실습교육(연 36회, 1.8만명 규모), 지역 내 IT 취약계층·소상공인 보조사업자 맞춤형 컨설팅 및 부정수급 현장 점검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k p f i s news

한국재정정보원,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공공분야 정보보안 강화 우수사례 발표

한국재정정보원은 7월 8일(수)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9회 정보보호의 날' 정보보호 콘퍼런스에서 '정보 유출사고,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공공분야 정보보안 강화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사례 발표에서 2018년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보안 First 정책 추진, △현황 분석, △전략 수립, △과제 추진(물리·관리·기술적 보안) 현황을 공유했다.



한국재정정보원, 미주개발은행(IDB)과 dBrain 경험전수 온라인세미나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은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LAC*) 회원국 등을 대상으로 dBrain의 안정적 운영 노하우를 전수했다. 지난 6월 세계은행(WB)과의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로 7월 10일에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환경에서의 한국의 재정정보시스템(FMIS) 운영 경험」이란 주제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 LAC(Latin America & The Caribbean): 미주대륙의 북미(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중미, 카리브 및 남미 국가의 총칭

애독자 QUIZ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과 함께 평소 재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재정 Talk Talk”에 질문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애독자 퀴즈 정답 및 다양한 의견 보내주실 곳

【 이메일 】 narajaejung@kpfis.or.kr

【 애독자 퀴즈 정답 응모 기간 】 2020. 8. 24. ~ 2020. 9. 13.

문 제

민간이 정부를 대신하여
도로와 철도, 교육 및
문화 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7월호
애독자퀴즈
당첨자 발표

☆ 퀴즈 정답
그린 뉴딜

☆ 상품 당첨자

dra*****@gmail.com
bhp****@gmail.com
ari**@naver.com
cho*****@naver.com
joo*****@gmail.com
yjc*****@yahoo.co.kr

※ 당첨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기프트콘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POSTCARD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이야기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온비드라는 용어 매스컴에서 들어보기는 했어도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국가 유류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국민의 복리 증진 및 편익에도
기여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잘 알게 된 것 같네요.

dra*****

※ 〈월간 나라재정〉의 개인구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narajaejung@kpfis.or.kr로 메일 주세요.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 재정의 밝은 내일을 위해
재정정보화를 이끌어갑니다.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